

第284回國會  
(定期會)

#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9月23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다. 노동부 소관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 가. 환경부 소관
  - 나. 노동부 소관
3.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환경부 소관

## 審査된案件

- |                               |    |
|-------------------------------|----|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 2  |
| 가. 환경부 소관                     |    |
| 나. 기상청 소관                     |    |
|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        | 2  |
| 가. 환경부 소관                     |    |
| 3.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2  |
| 가. 환경부 소관                     |    |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  | 36 |
| 다. 노동부 소관                     |    |
|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    | 36 |
| 나. 노동부 소관                     |    |

(10시16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환경부·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의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의 여부와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 집행 여부를 파악하

여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집행을 감독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간에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등을 먼저 심사하되 먼저 위 두 기관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 결산의 제안설명을 계속하여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두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부 소관

**3.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부 소관

(10시18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상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차관님 나오셔서 이상 환경부 소관 3건의 결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입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해외 출장으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공기, 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과 농어촌, 도서 등 취약지역의 환경기초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석면 관리, 지하수조사 및 국립생태원 건립 등 새로운 환경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고유가와 고환율 등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저공해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고 각종 부담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예산 집행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월 예산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진 사업의 경우에는 원인 분석을 통해 타 시·군으로 예산을 전환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을 보고드리면 총 3조 837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333억 원을 수납하여 79%의 수납률을 나타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976억 원 부족하여 긴축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의 지출액은 총 3조 56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7284억 원의 95.5%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1308억 원으로 대부분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376억 원으로 예산 절감액과 대기개선대책의 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으로 96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1.6%인 8836억 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출은 계획현액 7728억 원 중 96.9%인 7490억 원이 집행되었고, 1.3%인 10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8%인 13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건강영향조사 및 조류독감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 지원비,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원비 등으로 총 88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환경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석 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2008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준비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인원 현황, 예산 및 결산 개요, 회계별 세입 및 세출결산,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종합평가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금년 2월 25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난해까지의 정책기획관이 녹색환경정책관으로 조정되었고, 환경보건정책관이 신설되는 등 새로운 환경 수요에 대처토록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산하기관에서도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개편하였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합 작업도 금년 말까지의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 및 결산 개요입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된 3조 1309억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자체 세입에서 1126억 원이 증액되었고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폐기물부담금 용자원리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7.2%가 증가되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가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추경예산 149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가 증가된 3조 6095억 원입니다. 환특회계에서 8.1%, 농특회계에서 12.2%, 균특회계에서 5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 결산 개요입니다.

2008년 세입 징수결정액 3조 8376억 원 대비 수납액은 3조 333억 원으로 79.0%의 수납률을 나타냈으며, 수납률은 전년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06억 원으로 전년 119억 원보다 11.0%가 감소하였지만 불납결손율은 전년과 동일한 0.3%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7936억 원으로 전년 7944억 원 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법정부담금에서 대부분 미수납되었습니다.

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3조 6095억 원이었지만 전년도 이월액 302억 원, 예비비 사용액 886억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현액은 3조 7284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5.5%인 3조 5600억 원을 지출하고 3.5%인 1308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 대비 332%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환특회계의 세수부족과 균특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미지출된 이월액입니다.

불용액은 3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대기개선대책의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2008년도 신규 및 종료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 수도권 연결 사업 및 국립생태원 건립 등 24개 사업이며 종료 사업은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및 이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 9쪽은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당초 세입예산이 없었으나 국립공원의 국유재산사용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국유재산 토지사용료 등에서 세입이 7000만 원 발생하였고 그 중 6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조 8360억 원을 징수 결정해서 79%인 3조 317억 원이 수납되었고, 20.7%인 7936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0.3%인 106억 원이 불납결손되었습니다.

수납액의 60.1%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 8229억 원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추경예산, 예비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경상이전 수입이 8517억 원, 용자회수금 2223억 원, 용자금 이자수입 등 재산수입이 949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399억 원입니다.

13쪽,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 106억 원은 대부분 법정부담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채납자의 시효 완성으로 61억 원, 무재산 및 거소불명으로 25억 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큰 금액 6억 원, 기타 14억 원 등입니다.

14쪽의 미수납액 7936억 원의 경우에도 97%인 7965억 원이 법정부담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등으로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하는 징수유예 금액이 89억 원, 납부기한 미도래 167억 원, 행정소송 등에 의해서 계류 중인 정리유예가 143억 원,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 금액이 2461억 원, 기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금 등이 4791억 원입니다.

15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특회계는 당초 예산액이 없었는데 거창군 농어촌마을상수도정비사업에서 정산잔액으로 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특회계는 당초 예산액이 없었는데 경주방폐장 관련 지역 환경연구소 설치계획 취소로 국고교부액 및 발생이자 등 1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7쪽의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당초 1조 8203억 원이었으나 예비비 27억 원이 증액돼서 예산현액은 1조 8229억 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조 8229억 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27억 원은 태안지역 유류사고에 따른 주민건강영향조사에 20억 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관련 북한산 독립유공자묘역 환경정화사업에 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특회계 예산액은 당초 3조 1309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68억 원, 예비비 27억 원 등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3조 1604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5.7%인 3조 250억 원이 지출되고 3.1%인 993억 원은 09년으로 이월되었으며 361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액 3조 250억 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에 1조 3456억 원, 자연·대기·수질 등 환경보전사업에 9027억 원, 폐기물소각 시설 설치 등 폐기물관리사업에 2748억 원,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501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등은 뒤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으로 여기에서는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21쪽부터는 환특회계의 세출결산 집행내역입니

다.

우선 예비비 사용내역은 앞쪽에서 보고드린 일반회계의 전출액과 동일하고 22쪽 지출액 내역은 상하수도·대기 등 분야별 재원을 구분한 것이므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이월액 32억 원이 발생했는데 08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13억 원과 건강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충당에 7억 원, 환율 인상에 따른 하수도차관 원리금상환 부족액 7억 원과 지정폐기물차관 원리금 상환 부족액 등에 5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주요 재원은 대기개선대책의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에서 지원단가를 조정해서 그에 따른 절감예산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전용액은 216억 원으로 주요 사례를 보고드리면, 축산농가 피해구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003억 원 중 절감액 80억 원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조기 완공에 전용 지원하였고, 자연생태계 관리를 위한 전국 자연환경조사의 추가 및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장비구입비 절감액 10억 원을 전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사업 간 또는 유사사업 간에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25쪽은 이월액 내역입니다.

환특회계의 이월액은 99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자금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45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립생태원 마스터플랜 설계 용역기간 부족 및 국립생물자원 연구기간 부족 등 자연보전분야에서 121억 원이 이월되었고,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및 에코시티 모델연구 등 환경보호분야에서 자금 부족과 용역기간 부족 등에 따라서 34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6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61억 원인데 그 중 18.8%인 68억 원은 정부 방침에 의한 예산 절감액이고 나머지의 75%인 220억 원은 대기보전분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 소액의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나 대기보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유류가격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출시가 지연되었고, 핵심 부품의 수입 중단으로 하이브

리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는 등 고유가·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특회계 예산액은 1006억 원으로 99%인 1002억 원이 지출되고 먼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93억 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특회계 예산은 3780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4억 원과 예비비사용액 860억 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은 총 4674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93%인 4348억 원이 지출되고 6.7%인 31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출액 4348억 원의 주요 내역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3751억 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28억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61억 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에 429억 원, 지역환경 기술센터 운영 등에 79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월액 311억 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일부가 이월되었고 불용액 15억 원은 경북 지역환경연구소 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불용입니다.

29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먼저 2008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수입계획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7274억 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과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상·하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1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7274억 원입니다.

증가이유는 댐 상류 기초시설과 팔당지역 하수관거 2단계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228억 원 증액되었으며, 완공 환경기초시설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가 109억 원 그리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비용 지원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비가 1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32쪽에 수계관리기금의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 부분으로서 2008년도에 96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6%인 8836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804억 원이 수납되지 않았고 불납결손액이 5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04억 원은 납기미도래 593억 원, 체납 207억 원, 지자체의 정산잔액 미납액 4억 원으로 발생되었고 소멸시효 완성, 장기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불납결손액 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3쪽 수계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계획현액 7728억 원 중 96.9%인 7490억 원이 지출되고 101억 원이 이월, 13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준공기간 미도래 76억 원, 공기 부족 15억 원, 매수 토지 지장물 미정리에 따른 잔금 미지급 11억 원 등이며 불용액은 예산 절감 73억 원, 집행잔액 29억 원, 환경기초시설 규모 조정에 따른 28억 원,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7억 원 등이었습니다.

34쪽에서 37쪽까지의 4대강별 구체적 결산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국유재산입니다.

일반회계 국유재산은 대부분 국립공원 재산으로 2007년 말 1157억 원이었으나 2009년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른 국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서 2008년 말 현재액은 455억 원이 되었습니다.

환특회계의 국유재산은 2007년 말 7312억 원이었으나 국립공원 내 토지 매입 및 국립생태원건립사업 부지 매입 등으로 2008년 말 현재액은 7634억 원이 되었습니다.

40쪽에 국가채권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등 700만 원입니다.

환특회계 채권총액은 2조 7094억 원으로 법정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7912억 원, 상환기간 미도래 용자회수금이 1조 9163억 원입니다.

42쪽에 국가채무는 없습니다.

43쪽, 2008년도 종합평가입니다.

세입의 경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 예산 수입이 총 세입 대비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39%에 비해서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기술 발달 등으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차량 또는 배출 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의 감면대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재원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4쪽, 세출부문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283억 원이며 이 중 95.5%를 지출하였습니다는 전년에 비해서는 3.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 방침에 의한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 등을 들 수 있지만 2008년도 경우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수 부족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률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수입의 징수율 제고대책과 함께 고유가와 고환율 등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세입예산의 편성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예산의 집행상황 관리와 문제점 분석,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부진사업 개선과 지자체 간 예산의 재배분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쪽부터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기상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에는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해서 국가 태풍센터와 기상위성센터를 신설하고 황사 및 지진관측장비 보강 등 한반도 입체관측망을 구축하였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폭염특보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수요에 맞도록 읍·면·동 단위의 예보정보를 제공하는 동네예보를 작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였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기상상담을 해 주는 131 기상콜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등 기상청은 국민과 교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치예측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세계 2위 수준인 영국의 통합수치예보모델을 도입해서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기상정보의 고품질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PCC 부의장 당선과 세계기상기구 이사직의 승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기술 전수 등으로 기상·기후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상청과 지자체 간 공동협력 기상관측소를 확대하고 표준기상관측소를 설립하여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와 활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슈퍼컴퓨터의 안정적 운영환경 마련과 다양한 수치예측모델 운영을 위한 슈퍼컴퓨터 센터 신축공사와 슈퍼컴 3호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선진 기상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예보의 선진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보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8억 2700만 원이었으나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16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5억 9300만 원이 수납돼서 수납액은 전년 대비 25.7%가 증가되었고 구상금 등 1억 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2016억 원 중 93.3%인 1912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83억 원, 불용액은 21억 원입니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상예보 부문에 642억 원, 기상관측 126억 원, 기후변화 30억, 지역기상업무 및 기상연구 부문에 241억 원, 기상행정 지원에 87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 결산개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기상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운 기상청 차장입니다.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입니다.

차장급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2008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상세 개요

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채권·물품·국유재산 현황, 종합평가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8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예산액보다 9억 원이 많은 17억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이 중 16억 원이 수납되고 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납액 16억 원의 주요 내역은 항공기상정보 및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8억 원, 태풍센터 청사 및 관사 부지 교환 차익 등 토지매각대 4억 원, 기상지진 기술개발 사업 출연 정산금 4억 원입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태풍센터 청사 및 관사 부지 교환 차익 등 토지매각대 4억 원, 태풍센터 관사 임차료 반납에 따른 기타 경상이전 수입 등 4억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000억 원이었으나 강원지방기상청 청사 신축 지원 등 전년도 이월금 16억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현액은 201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94.8%에 해당하는 1912억 원을 집행하였고, 슈퍼컴센터 신축 지원 등 8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및 정원 미달 운영 등으로 22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6쪽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은 자료로 같음을 하고, 7쪽부터 12쪽까지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기상예보 부문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상관측위성 개발 사업에 211억 원, 슈퍼컴 2호기 및 IDC 임차료 등 슈퍼컴 운영비 167억 원, 기상정보 교환망 시스템 운영비 156억 원, 슈퍼컴 전용 건물 건립에 108억 원 등 64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상관측 부문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상·해양·고층·지진 관측망 사업에 69억 원, 기상레이더 및 낙뢰 시스템 운영, 기상관측 표준

화 사업에 총 1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 지출 내역은 아·태기후네트워킹 사업에 13억 원, 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산업 활성화에 17억 원, 총 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산 등 5개 지방청, 항공기상청 운영 등 지역기상 업무에 149억 원을 지출하였고,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선진기상 선도기술 개발 등 기상연구 부문에 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상행정 지원 부분에서는 인건비 555억 원, 기본경비 174억 원, 기상지진 기술개발 사업, 국제기상 협력에 130억 원, 총 85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OEC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에 1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이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동네예보 시행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기상대 신설 및 승격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17억 원을 이용하였고 환율 상승에 따른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 부족으로 2억 원을 이용해서 총 19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전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예보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장비 보강 등 부족액 11억 원, 환율 상승에 따른 레이더 등 임차료 부족 4억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기관 운영비 등 25억 원을 전용해서 총 45억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는 1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슈퍼컴센터 신축 및 강릉레이더청사 신축, 거창·남원 기상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6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고층 관측용 물품 구매 계약 지연으로 14억 원을 이월하여 총 8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액에 9억 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인건비 집행에 6억 원, 기타 집행잔액 6억 원 등 총 2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쪽의 채권 현재액, 22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3쪽의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8년도 결산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2008년도 세입에서 수납액은 16억 원, 미수납액은 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무서를 통한 재산의 추적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0억 원, 1912억 원을 지출하고, 83억 원을 이월, 2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07년도의 16억 원에서 2008년도 8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슈퍼컴퓨터센터 및 강릉레이더청사 신축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환율 급등에 따른 관측용 소모품 물품 구매 계약 지원으로 이월액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사업별 집행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집행 부진의 원인을 분석해서 불용·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 이후의 참고 자료인 2008년도 정책 추진 성과, 프로그램 결산 및 집행명세서는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기상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에 대한 검토 의견과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요약본의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통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 수급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7개 시·군에서 957명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주민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이와 같은 부정 수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부 예산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취약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평가하여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회계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률적인 예산 절감 및 타목적 활용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2008년 소관 예산 중 1995억 9200만 원을 절감하여 이 중 1859억 6400만 원을 이·전용 및 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새 정부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측면이 있으나 이는 국회가 확정된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무리한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 부실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환경부 소관 여비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 여비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고 국내 여비의 국외 여비로의 전용 및 조정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여비 예산 증액과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가 곤란한 점이 클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 정책 여건 변화 상황 속에서 경유차 기술 발전 및 이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부가 지방 환경청 등의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고지 누락에 따라 부과되지 못하였는바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부문별로 크게 나누어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전략 부문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순수 기술 개발 성격이 아닌 정책기반 조성 성격의 연구과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집행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법정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운영비 중 국고지원금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바 지원 기한을 명시하고 점차적으로 지역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 정책 부문에 있어서 수도권 대기 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경우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계획 대비 추진 성과가 부진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등에서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도 있었습니다.

2008년 수도권 대기 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당초 예산은 2379억 2200만 원이었으나 환경부 차원에서 불용액만 191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 중 불용액 203억 1500만 원, 이월액 139억 30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전체 미집행액이 566억 1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2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은 각 세부사업의 추진 실적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하이브리드 보급 사업의 경우 당초 180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942대에 그쳤으며 저공해 경유차의 경우 2700대 보급 계획에 1081대, 전기 이륜차는 190대 계획에 51대 보급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기 이륜차의 경우 2008년 말까지 총 458대를 행정기관에 보급하였으나 이 중 상당수가 고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민간 이전 사업비도 예산 현액 94억 7700만 원 중 23억 74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수용비 중 3800만 원을 별도의 사업이 있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실태조사비로 사용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연구 등 사업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과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등 목적 외 지출이 있었습니다.

대기 유해물질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사업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부착 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부진하였습니다.

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 대책 사업의 경우 8억 200만 원을 전용하여 주로 홍보비 및 전시성 행사비 등에 충당하였으며 민간 이전 사업비가 다소 부적절하게 편성·집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물환경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기타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운영 중인 시설 중 상당수가 30% 이하의 폐수 유입률을 보이는 등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동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낭비 요인이 크므로 가동률 제고 대책 강화와 국고보조 비율 조정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보완·정비가 필요합니다.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에 있어서는 연구용역 중 준설 등에 의한 수질영향 사례조사 용역 사업,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등은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로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던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 사업의 경우 부처 간 중복 추진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용을 통하여 신규사업 성격의 낙동강 취수 가능 지역 조사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은 집행 부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후 수도관 교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방식을 기존의 용자금 지원 방식에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물 절약 홍보 사업 중 민간 역무 대행 사업으

로 추진한 일부 사업 예산은 예산 편성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사업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연 보전 부문에 있어서는 습지 보전 관리 사업에서 각종 장비설치 공사 계약의 연말 집중으로 9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대암산 용늪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는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사업의 취소 및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이 있었는데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대상 사업 중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의 2008년 예산액 30억 전액이 구영초등학교 생태숲 조성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집행되었는데 반환 대상 사업 중 들꽃 학습원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및 학교 생태연못이나 생태숲 조성 사업 등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국립공원 지킴이 사업은 공원 보전 목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며 체계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출연 사업에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퇴직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연례적으로 기타 비목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퇴직급여 수급자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순환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서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지자체의 실 집행 실적의 부진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 실적이 낮을 뿐 아니라 전용 증액하는 등 예산 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전액 재해대책비가 아닌 일반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주로 태안지역 주민건강 영향 조사, 조류독감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사용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 관련해서는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의 수가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2008년 2001건에 달할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매년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마을, 읍·면, 시·군·구 등 다단계를 거치면서 사업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리 인력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부정 수급이나 부적정 집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기금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 요소를 평가·보완하고 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부정 수급 및 부적정 집행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8쪽 기상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연례적으로 세입 예산액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 과소 계상되고 있어 최근 징수 결정액 추이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 등 면허료 및 수수료의 지속적 누락도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는 기상법상 수수료 징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이·전용에 있어서 방식, 절차, 대상, 범위 등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광범위한 이·전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제 개정에서 절차나 사전 계획이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이·전용이 과다하였던 점 등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전용 건물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지반조사의 부실로 연약지반에 의한 공사 지연이 나타났는데 슈퍼컴퓨터 3호기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 및 유지 단계에서의 충실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동네예보의 다소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정확도 부족이 신뢰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IT 기술과 접목된 정보 제공이 정보 약자에 대한 소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지진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출연금 규모에 비하여 연구 성과가 부진하므로 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할 이동식 지진계 구입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진관측장비 보강 사업의 경우 시추공 지진계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가 관계기관과 협의 불가로 생략되었는바 이는 장비의 중요도와 높은 설치비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노동부 소관 결산심사 일정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나라당 소속의 강성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강성천 위원 세출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부 결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출비용이 95.5%로 2007년 대비 3.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차관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환경부의 결산 개요에 따르면 지출액의 감소 사유를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부족, 최근 경제위기 영향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 중에서 첫 번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을 살펴보면 환특회계 수납률이 2007년 78.4%에서 2008년 79%로 개선되고 있어서 환경부의 주장과 다릅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상황은 맞습니다만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납률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세입예산액을 좀 높였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은 균특회계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59.6% 증가했으며 세출 결산에서는 오히려 이월액이 6.7%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맞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이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세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현액과 비교했을 때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하고 세출 예산, 여러 가지 해석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인데 세입결산의 불납 결손율과 미수납률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된 점에서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차관께서는 지출액이 감소한 실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실제로 여러 가지 예산의 특성상 세입 감소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매칭펀드가 줄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의 예산의 경직성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이월액과 불용액이 2008년에 크게 증가한 것이 지출액 감소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이월액은 2007년도 302억 원에서 1308

억 원으로 330% 증가했고 불용액은 165억 원에서 376억 원으로 128%가 증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사실입니다.

○**강성천 위원** 환경부의 2008년도 세입 예산은 2007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12%로 대폭 증가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큰 폭의 예산 증가를 집행할 능력이 부족한 탓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도의 경우는 경제위기가 하반기에 닥쳤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웠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외적인 예측 능력이 좀더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자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예비비 26억 6300만 원 중에 태안지역 유류 유출 사고에 따른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19억 6300만 원이 배정됐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태안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업비로 예비비를 포함해서 25억 원을 태안보건의료원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말 현재 실제 집행률이 15%에 불과한데 굳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이것은 조금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교부된 시점이 11월 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로 자르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낮은데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천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계속 집행이 돼 가고, 아마 잔액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8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859억 5500만 원인데 이중 조류독감 피해지역의 상수도 설치 지원에 545억 7800만 원이 지출된 것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환경부는 2008년 6월 25일 조류독감 피해지역 13개 시·군에 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비 545억 7800만 원을 균특회계 예산으로 교부했으나 충남 논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는 2008년 12월 말 현재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미지급된 것은 아니고 논산 같은 경우는 현재 700만 정도 미집행돼 있는 통계고요, 나주시는 지금 16억 중에 1억 4000 정도 미집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천 위원** 게다가 환경부는 예산 교부 이후 지자체의 집행 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다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비로소 집행 실적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차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사실 그것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차 확인한 것이지 평소에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성천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국가재정법 제22조는 예비비의 목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편성과 집행 실적 관리에 신중함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천 위원**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전병성** 예.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009년도 기상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적설 자동 관측망, 안개 관측망, 라디오미터 고층 기상관측망 등의 사업은 관측장비 도입 지연에 따른 임차료 미집행으로 인해서 2008년도 예산의 집행 부진이 예상되므로 2009년도 사업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것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예,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청장께서는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8년도 기상청 결산에 따르면 실제로 이 세 가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평균 40.6%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이용 및 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애초부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의도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다가 부득이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고층 기상망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 그리고 입찰 참여 업체 부적합이랄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계약이 지연됐고요. 안개 관측망도 업체의 어떤 이의 청구 때문에 법원 재판을 기다리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강성천 위원** 기상청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장비 도입 낙찰 차액 등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에 포함시켜 예산 절감 실적으로 포장했습니다. 맞지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년도 결산 분석 보고에 의하면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절감 실적으로 과장하였다고 평가했지요.

예산 절감으로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전임 정 청장이 이 세 가지 사업의 예산을 목적대로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는데 전병성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원래 예산은 국회에서 정해진 목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국회에서 정해진 목대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청장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측장비 임대료 지급 방식을 현행 선지급 방식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장비 도입 예산의

집행 부진은 해결될 수 없으므로 후납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상청장 전병성**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후납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임차료가 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피하면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장비 도입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소속의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환경차관님께 좀 묻겠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범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인데요. 이것은 아까 강성천 위원님하고 좀 비슷하네요.

환특 세입 부분의 범정부담금 수납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계속 줄었습니다. 2008년도가 50.5%입니다.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도 늘 고치겠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쳤다는 것은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무슨 노력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사실 이 문제는 환경부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소액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 방법의 간편화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 두 측면에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징수 방법을 좀 간편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차량 같은 것 매매할 때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소액이 많아서 다소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선택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설물보다는 자동차 쪽이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래서 작년 국감 때 제가 경유차에 부담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을 여러 가지 시대적 추세, 현실적으로 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재정부 쪽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폐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과거 경유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차들은 경감을 하고 과거 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전체 액을 줄이기에 환경예산에 부담이 돼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은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

○**권선택 위원** 작년엔, 1년 넘었습니다, 벌써.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전부 뺄 수는 없는 것이고 선별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다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러니까 한 이삼년 걸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예, 하여튼 다음 국감 때 좀 따져 보기로 하고요.

4대 강 유역 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총괄, 또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좀 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34개의 중점관리유역 가운데 목표연도가 끝나도 8개 정도는 목표수질에 다다를 수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 또 공사 과정에서 수물, 침수, 또 흙탕물 이런 것 때문에 취수장에 흙탕물이 공급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4대 강 유역을 했을 경우에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 목표하고 있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관님이야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 어떻

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시물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06년도 한 76% 정도 좋은 물을 한 84~8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86%까지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제는 공사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탁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9개 권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환경관리계획 자체에서도 어렵다고 판단……

○**권선택 위원** 제가 우려하는 시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권선택 위원** 그다음에 준설토 문제가 있지요? 5억 7000만t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그 정화비용 자체가 4대 강 유역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팔아서 활용하는 지자체라든가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그 퀄리티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게 있는데……

○**권선택 위원**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하여튼 환경론자들은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자체에서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입찰 안내서를 보니까 ‘수리모형 실험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냈더라고요. 이것도 환경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이 되어 가지고 8월에 4대 강 추진본부에서 모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발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된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추후에 확인해 보고요.

또 모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이게 당초 10개월로 잡았다가 4개월로 줄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권선택 위원** 오해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서류가 도착해서 평가하는 그 시점이 있고 또 사전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하고 달리 작년 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사실 영향평가 작업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속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택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착공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절차를 이행 안 한 것, 폐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이것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규정을 어기고 한 적은 없고, 오해가 있었던 것은 착공식을 착공으로 보느냐 이런 오해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권선택 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 절차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약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것은 본평가가 나오면 아마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나중에 국감 때나 다시 한번 보고……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4대 강 유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국감 전까지?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권선택 위원** 그리고 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지난 16일에. 이게 뭐냐 하면 내수 기반 확충 방안입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환경부 관련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 완화시키는 문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 내용이 지방상수원은 10km 이격, 광역은 20k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7km까지 완화시키겠다 이런 논의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권선택 위원** 확정된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확정됐다기보다 기준안을, 지금 개선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마 규정이나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제시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이 부분은 사실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리가 된 건데요. 사실 대중 골프장은 이미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폐수 비배출 공장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 회원제 골프장도 사실 같은 개념인데 이것만 규제를 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조정을 한 그런 것입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풀어도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같은 선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폐수 비배출……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권선택 위원**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차관 이병욱** 완화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 예를 들어서 폐수가 상수원으로 들어간다는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권선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냥 같이 가 버리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선택 위원** 환경문제 검토가 안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환경문제를 무시하고 규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저희 환경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것은 다시 또 확인해 볼게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권선택 위원** 또 지난 지경부에서 보니까 외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을 허용하겠다 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사실 이것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요. 작년도에 기재부에서 사실 그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 올해는 아마 지경부에서 스스로 철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정도 들었는데……

○**권선택 위원** 철회가 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철회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것 누가 좀 답변해 보세요. 관련 국장 누구입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전혀 협의가 없었고요. 다만 그 담당 국장이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든지 발표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언론에 크게 났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어제 지식경제부 차관께서 기자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안에 대해서 추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만……

○**권선택 위원**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예.

○**권선택 위원** 지경부가 식사하면서만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권선택 위원**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절대 용납할 생각은 없습니다.

○**권선택 위원**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왜 못 합니까? 여러분들 의무입니다, 그것은.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선택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화수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한나라당 안산 상륙 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차관님,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또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를 최종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지방은 국고보조를 100%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50%만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이 문제는 사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다시 말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수도권하고 공장하고 공장 분포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실제 공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 아무래도 많겠지요. 수도권은 좀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면 지방이 더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수도권은 폐수처리 제대로 안 해도 되고 지방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볼 수도 있나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그런 논리보다는 수도권의 입지를 조금 어렵게 함으로써 아마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폐수처리를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지난 정권에서 국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정치 논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지방과 수도권…… 그러니까 세금은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李和洙 委員** 이 보조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꼭 좀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이 136개인데 폐수유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한 60%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李和洙 委員**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예를 들면 지금 파주 문산의 경우 8.6%, 화성 장안은 7.7%, 음성 소이는 10.1%, 논산은 11.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사실 문제가 수도권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할 수도 없고 해서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도산이나 또 파업, 폐업 이런 것들이 속출함에 따라서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

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유입률이 적어졌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확히 잘 예측을 해서, 꼭 정확히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을 신설하게 되면 국고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폐수처리장을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제가 보니까 옛날에 이게 100% 국고 지원 내지 50% 이상 국고 지원하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확보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은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발되는 그런 경우, 과대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용량을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해 가지고 반 정도 시작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다시 증설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비 중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예산 현액이 약 2047억인데 이 중 실제 집행한 금액과 이월과 불용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2000억 중에서 한 600억 정도, 한 550억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미집행률이 24% 정도 되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처럼 자치단체에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차원에서 보면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의 사

정,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부품 공급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운행차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집행을 정지했다가 나중에 풀어서 시작하는 시행기간의 문제, 또 아시겠습니까마는 중소기업에 공급했던 저녹스버너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고발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 상황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공급하는 것도 2007년도 400대였는데 2008년도 2700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노출이 되는데도 공급 물량만 대폭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되겠나 하는 것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상당히 축소 조정했구요, 원래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자동차 메이커들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또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전체 사업 규모는 계속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 우편배달용 전기차량 120대를 공급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분석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전기 이륜차 자체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거나 이런 것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요구하는 수준이 못 되니까, 소포 같은 것 이런 많은 무거운 것을 실어야 되는데 제대로 커버를 못 한다 이래 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메이커들하고 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전기차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까지 커버를 못 하면 제대로 자문을 받아서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다음은 기상청장님, 요즈음 기상예보가 아주 잘 맞거든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감사합니다.

○**李和洙 委員** 많은 국민들이 대단한 만족, 그리고 기상청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셨나요?

○**기상청장 전병성** 다들 기상청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和洙 委員** 말씀을 크게 좀 하세요.

○**기상청장 전병성** 기상청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외국인을 새로 채용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상당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 그러니까 예보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수준을……

○**기상청장 전병성** 우리 크로퍼드 단장은 미국 기상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예보관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기상청장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클라호마는 기상이변이 아주 심한 그런 주입니다. 거기에서 메조넷(mesonet)이라고 기상관측시스템을 첨단화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잠깐만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장비도 외국에 비추어서 수준이 아주 떨어진다고나 이 정도인지……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기상청장 전병성** 기상장비를 그동안 첨단화·현대화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수준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미국 수준으로 현대화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분야의 이월액이 774억 원이지

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월액 중에서도 반이 넘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주로…… 우리 전체 예산이 원래 상하수도가 많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상희 위원** 반이 넘는데 이 이유가 지금 환 특·국특의 세입 결손으로 인한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주로 지자체 매칭펀드 부족이 많습니다.

○**김상희 위원** 내년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 조사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있고……

○**김상희 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요구안 보니까 1조 3000억을 배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4대강 수질개선 예산으로,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적어도 내년 상황도 그렇게, 환 특·국특의 세입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세입 결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부족한 세수에서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좋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결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상희 위원** 그렇지 않은데, 지금 경제사정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호전되는 분위기가 있지만 내년에 우리가 예산으로 쓰는 부분은 앞으로의 경제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지가 않지요.

○**김상희 위원**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세입 결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만큼은 되지 않을 것……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조 2000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현재로는 전용할 계획도 없고 또 기존 상하수도 분야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결국 4대강 사업의 보와 준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돼야 될 환경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현재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 예산은 오히려 전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늘어난 그런 정도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은 하여튼 예산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다른 부분의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부분에, 지역에 투자가 골고루 돼야 될 환경 예산이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낙동강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영향을 안 주도록 짜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앞서서 권선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어느 정도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와 연구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차관님의 답변은 전혀 저희 의문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추후에 기회가 되시면……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수자원공사 같은 데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부의 경우에는 떠넘길 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 안에서 다른 부분을 축소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차관께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상희 위원** 그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다시 따지도록 하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정기구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이 방만하고 아주 변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액면상으로는 그렇게 불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상희 위원** 예산 중에서 5억을 람사르 총회 홍보비로 쓰셨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비용을 2억 6300만 원 증가했지만 결국 임차보증금 1억 3900만 원은 전액 불용됐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결국 총예산 중에서 2억 2100만 원이 이월되고 2억 11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이 과행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전적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 요인을 굳이 들자면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비되기 전에 집행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지금 심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언제 제출됐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제출된 것은 제가 알기로 몇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희 위원**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이 당시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별로 근거가 없을 때입니다. 근거가 없을 때인데 어떻게 그것을 녹색성장위원회 출범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위원님이……

○**김상희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엄연히 법정기구로서, 또 국회에서 책정한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는 그야말로 논의 중에 있었고 출범도 2009년 2월이나 했고 법은 몇 개월 전에 왔습니다, 국회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2008년도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김상희 위원** 왜 안타깝게 합니까, 환경부가?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런데 환경부 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상희 위원**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본법 제정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애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2조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 조를 다 삭제하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환경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 내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전 세계적인 동향에 맞게 모니터링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지수 관리·평가 이런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대로 기능을 두는 것으로 하고 또 일반적으로 경제·환경 쪽만 녹색성장 쪽으로……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0개 조를 삭제하는데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내용을 보면 기후 변화 대책이 상당히 주내용입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제정한다고 그래서 10개 조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혀, 저는 역할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008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녹색성장위원회—2008년에는 그랬습니다—그 관련해서 예산을 다 전용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기능 자체가 녹색위에서 하는 기능하고 지금……

○**김상희 위원** 저는 지금 2008년 결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도 아닙니다. 벌써 2008년도부터 환경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당시는 정부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위한 근거되는 관련 예산이라든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유사한 그런 기능이기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일부 선집행 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법정위원회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논의하고 있는 것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김상희 위원** 이런 식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해도 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대기 부분에서 보면……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해서 종합 대책에서 8억 200만 원을 전용하셨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김상희 위원** 이 전용한 내용이 주로 뭐니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기후변화 콘텐츠 온·오프라인 홍보,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개최…… 도대체가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환경부가 아무런 이니셔티브가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그 내용은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린스타트나……

○**김상희 위원** 나중에 왜 보고를 드립니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지금 그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의식 개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김상희 위원** 기후변화협약 대응하고, 지금 그 내용이 뭐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협약 대응은 별도로……

○**김상희 위원** 협약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작년에 8월 15일, 녹색성장 대통령 비전 발표 이후에 그 홍보로 다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환경부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상으로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논리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 환경부가 정신 차리십시오.

○**환경부차관 이병욱**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한나라당 소속 박준선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신 한나라당 박준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차관님, 그다음에 청장님.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차관님, 차관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1년 한 7개월 다 되어 갑니다.

○**박준선 위원** 공직생활은 차관이 처음이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산 한 1년 남짓 집행해 보시니까, 이제 두 번째 예산결산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가, 지금 민간 분야에서 또 학계에서 계속 평생을 계시다가 차관이 되어서 지켜보시니까…… 물론 결정권은 장관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그래서 꼭 반드시 환경부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싶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중구난방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상당히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적인 집행 방법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플렉서블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국회 심의 과정이나 또 항목 이런 것들이 다 경직되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나 혹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용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상당 부분 어쩔 수 없는 것도 인정함

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항목에 딱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특히 지자체에 이양된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문제나 기타 폐기물 관련 예산들은 실제 정부의 몇몇 안 되는 인력으로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도 밖에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정부예산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하면서 그 퍼센티지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이런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전입되는 예산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이 약 15% 정도를 차지하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액수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 올해 12월 31일 날 폐지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확정은 못 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는데 좀 연기를 할 생각을 지금 정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정확한 일정은 아직……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연기가 안 되면, 결국?

○환경부차관 이병욱 거의 정부 내에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대책이 필요 없을 테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럼에도 저희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계속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체세원 발굴 내지는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

를 유도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된 것 보면 대체로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자체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전입 세원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연기를 한다면 얼마나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글썽, 정확한 날짜를 지금 밝히기는 좀, 시기가 맞지 않아서 많으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박준선 위원 3년을 하더라도, 지금 3년이면 금방이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금방입니다.

○박준선 위원 금방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체세입원의 확보 대책을 해서 미리 준비하고, 최소한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정부 전체 방침은 어닝 택스(Earning Tax)에서 버닝 택스(Burning Tax)로 바뀐다는 것은 거의 방향이 잡혀 있는데 문제는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일반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 환경 개념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환특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다 전환한다든가, 옛날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박준선 위원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환경 관련 부담금제도 이것도 운영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징수율 제고 대책은 물론이지만 일부 조세 성격이 있는 것은 조세로 아예 전환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담금 간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통합하고 그다음에 아예 행정별로 해 가지고 벌금으로 한다든가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이런 것은 조세로 전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수

가 있는데요. 부담금 성격이나 준조세 성격 중에서 세수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어떤 조장적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자는 유지를 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세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없어도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하여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조만간 폐지되고 연기되더라도 언젠가는 폐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입 대체하는 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부담금에 대한 어떤 것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방안 이것은 환경부에서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현재 나와 있는 안 가지고라도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사업 이것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보급률이 70%에도 못 미치고, 충청도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충남 청양, 전북 완주, 청주 이런 데는 30%, 20%대예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올해도 예산을 그쪽에 배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광역 단위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해 왔는데 1차적으로 2개 권역하고 MOU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지원인데 이게 원래 용자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자를 해서는 지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합의를 봤습니다. 기재부와 합의를 봐서……

○박준선 위원 국고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국고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 그래서 저희 양 부처 차관들 합의서 까지 써 가지고 지금 작업을……

○박준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점오염원…… 과거에는 점오염원이 대다수의 오염 배출

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2003년도에는 점오염원이 44%,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 55.9%, 그리고 앞으로 2015년에는 비점오염원이 약 67.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준선 위원 올해도 예산 집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 뭐 아시겠습니까만은 한계비용의 문제인데 점오염원을 당장 줄이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비점오염원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세수라든가 예산 수준이 되니까 비점오염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에서도 여러 도로망이 개설되고 이런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대책이나…… 일단 제가 보기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계가 안 선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세우는 예산이 일단은 시급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비점오염원이라고 해 가지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도로라든가 새로운 설비, 그다음에 도시설비가 재정비되고 그러는데 그런 비점오염원에 대한 어떤 관리나 종합적인 관리체계 이것을 일단 하는데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이런 대도시 이런 데 새로 신도시 생겼을 때 아파트나 이렇게 집적이 되면 비점오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치식으로 하느냐, 자연식으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태공간 같은 것을 확보 안 하고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래서 자연하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박준선 위원 25초 남았으니까 우리 기상청장님한테 한 말씀……

요새 하여간 예보가 잘 맞는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새로 선진화단장으로 외국분 영입하신 것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도 이·전용이 너무 많은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홍희덕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준설 등에 의한 수질영향 사례 조사도 했고, 이 연구용역이 애초에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비에서 전용되어서 지출이 되었고요. 산업폐수 관리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연구비에서 집행한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준설 등에 의한 수질영향 사례 조사 연구는 대규모 준설을 요하는 운하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실시한 연구조사 아닙니까, 차관님?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반도 대운하도 그렇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대규모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2008년도 당시에 운하사업을 보조하려고 역지로 산업폐수 관리 연구개발 항목에 있는 것을 전용한 게 아니냐, 급하게 연구결과를 내 오려고.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박준선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연구보고서 보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오타방지막, 오타방지펜스, 펌프선에 의한 흡입식 준설 공법 등이 이미 이 연구보고서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 결과가 결국은 4대강 사업에 반영된 것은 맞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홍희덕 위원 또 다른 연구조사사업인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의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이것도 했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홍희덕 위원 이것도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사업에서 집행되었지요?

이 연구보고서에서 말하는 청정수원 확보라는 것은 취수원 이전을 가정한 것이고 이 역시 운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불가피하게 취수원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취수원 개보수와 이전이 필요함을 밝혔거든요.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운하사업을 대비해서 취수원 이전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맞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그때 상황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워낙 취수원 이전 문제가 첨예하게 지자체 간에 갈등요인도 있고 해 가지고 환경부 입장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연구용역 사업이 운하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사업이 산업폐수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은 분명하고요. 환노위 전문위원도 검토하였듯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쯤 하고요.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준선 위원께서 지방상하수도 관련해서 좀 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환경관리나 수계사업은 유역별로 관리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는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환경부도 통합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다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운영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저는 있습니다.

상수도 광역관리도 유역 차원의 관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 운영도 차체에 유역 차원의 관리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환경부차관 이병욱** 저희로서는 그게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구조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속이고 또 그 나름대로 광역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환경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체계를 잡는 것은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시스템을 전혀 무시하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야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인 상하수도의 경우 이걸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물의 재이용, 빗물 이용과 같은 물의 순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의 유역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물 순환 시스템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면 상하수도의 여러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물의 재이용과 빗물 이용 등 노후 수도망 교체에 예산을 투입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관망을 처음으로 국고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의 재이용 문제, 빗물 이용 문제는 지난번에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전체 물순환 체계를 체계화하고 또 선진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전병성** 예, 기상청장입니다.

○**홍희덕 위원** 2008년 6월 26일 충북 오창에서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사가 착공됐죠?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연약한 지반, 암반도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죠?

○**기상청장 전병성** 예, 조금 지연됐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로 인해 무리하게 공사기일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12월 17일 공사현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죽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죠?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만 책임업체를 문책하지 않고 12월 30일 다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 가지고 다시 1명의 노동자가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9년 3월 20일 그때 가서야 업체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느장으로 대응한 점이 있고 아무리 이 공사가 중요하고 조기 완공이 시급했다 하더라도 인명이, 노동자가 이렇게 죽고 다치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공사를 할 때도 노동자들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명, 부상 이런 게 더 우선돼야죠, 그렇죠?

○**기상청장 전병성** 예.

○**홍희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외시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고요.

○**기상청장 전병성** 예.

○**홍희덕 위원** 아울러서 저도 요즘 국민들이 우리 기상청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시간이 조금 밖에 없네, 대기질 관련해서요.

우리 차관님,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대기질 오염으로 연간 조기 사망자가 1만 4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토피나 천식환자도 계속 늘는 통계가 있고요.

2008년도 예산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예산집행이 저조하죠?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조사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도 정책 도입 전에 연구용역을 했죠?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당시 제가 여기 있지 않았는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전기이륜차 도입할 때 어떤 조사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 평가, 그다음에 비용편익분석도 하고 또 국내 여건에 맞는 문제를, 이제 전기이륜차 성능도출을 할 거냐 하는 건 현재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구 중입니다.

○**홍희덕 위원** 이런 정책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들도 좀 참여시키고 의견수렴도 좀 하면서 정책을 조율해 가는 민주적 과정을 좀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건 뭐 통감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희덕 위원님.

다음 질의순서는 한나라당 소속의 박대해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먼저 차관님께 근본적인 환경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3개의 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환경부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특이한 재정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2008회계연도 기준으로 환경부 재정구조에서 85%를 차지하는 환특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조 8229억 원과 자체세입 1조 2088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정기적으로 수입, 지출이 생기는 부분에 적용하고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인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 특별회계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죠?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재정 운용은 예산통일주의에 반하고 또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별회계의 세입구조 자체가 견실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서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진출금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회계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실제로 2008년도 특별회계의 부담금 징수율을 살펴보면, 징수금 금액은 징수결정액의 47.2%인 6245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징수결정액의 25.4%인 108억 원만 징수됐기 때문입니다. 맞죠?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두 번째 문제로 특별회계는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부담금 설치목적인 특정 공익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부담금 수입과 지출의 연관성을 떨어뜨려 부담금 부과 정당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지 특별회계 재원확보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관님, 매년 이렇게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유지하실,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환경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주요 자체 세입원인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 견해를 간단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까라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탄소세나 환경세, 에너지세 이런 말

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세수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세원의 어떤 균형, 이 문제를 재정당국하고 아직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대체안을 지금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기에 대체안이 마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2008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에서 234억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4대강수계관리기금에서 173억 원 등 총 407억 원의 재정투자가 계획이 되어 그 가운데 40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맞죠?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박대해 위원** 그런데 2008년 수질관리 관련 예산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 중 비점오염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3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맞죠?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2006년 환경부에서 나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2008회계연도 환경부의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비점오염관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오염원을 연구·조사하여 계획도 세우고 관련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과의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관리하기 수월하고 또 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점오염원 관리에만 예산을 집중시키고 비점오염원 관리에는 수질 관련 예산총액 2조 원의 1.1%인 234억 원만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정부가 뭐하러 돈을 들여서 연구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법을 개정을 합니까? 연구조사 따로 또 재정투자 따로, 이렇게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비점

오염원 재정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적하셨듯이 2조 원에 비하면 뭐 1.1%라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거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하수도 문제는 주로 비점오염원은 이제 주로 도시라든가 농촌 마찬가지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데 대한 그 효과성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여력이 좀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 온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노출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 단계다,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4대강도 그렇고 또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또 그다음에 고랭지 채소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또 체계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상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슈퍼컴 운영 관련 결산은 224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박대해 위원** 결산내역을 보면 슈퍼컴퓨터 2호기 운영에 167억 원, 슈퍼컴 전용건물 및 관리에 57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2호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대해 위원** 지금 2009년까지 장비금액 500억, 운영금액 320억, 총 82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예.

○**박대해 위원**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

했는데요. 2호기는 이제 아쉽게 그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3호기 도입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넘겨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박대해 위원** 그렇다면 슈퍼컴퓨터 2호기는 언제까지 운용할 계획입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금년에 3호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호기는 내년까지 병행 운영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2011년부터는 2호기가 3호기로 대체될 그런 계획이죠?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그 2호기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지금 2호기 용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2013년까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래서 지금 폐기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1호기는 폐기를 했죠?

○**기상청장 전병성** 1호기는 폐기를 했습니다.

○**박대해 위원** 2호기도 앞으로 또 폐기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이 2호기를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병용해서 쓰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쓸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정하려고 하는데요.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박대해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아주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결말만 짓겠습니다.

은퇴하는 슈퍼컴퓨터 2호기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냥 폐기하지 말고 잘 활용을 해서 한반도 주변의 기후변화를 연구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미칠 영향 등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슈퍼컴퓨터 2호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위원님 제안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박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소속 이두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재윤 간사와 사회교대)

○**이두아 위원** 환경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온 것은 범정부담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단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보급 문제,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 이런 것을 질의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우선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서면질의로 대체해도…… 또 많은 분들이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말씀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안과 관련해서 우선 오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에서도 요새 현안과 관련해서 해명 자료를 많이 내시고 하셨는데 AI 발생 지역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게 AI 살처분 매몰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환경 문제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앞에 말씀을 많이 안 드리더라도 차관님께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순서를 원혜영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게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던 게 뭐였냐 하면 며칠 전의 조선일보 기사인데 ‘청동기시대 소금 채굴이 부른 환경 재앙’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 동북부 지역의 얘기인데 청동기시대 소금 채굴 때문에 그 폐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19세기에 이 지역 주민들의 수명은 타 지역보다 평균 10년 짧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청동기 지역의 소금 채굴의 영향이 19세기·20세기·21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AI 매몰 관련해서 저희가 상수도 지역에 대해, 상수도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산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앞서서도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

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을 조사기관으로 해 가지고 과거 AI 매몰지 표본조사에서 15곳 중 14곳의 지하수가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해명 자료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또 보도자료를 내서 향후 조치 계획으로 2010년부터 나머지 AI 매몰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 여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차관께서는 지난 2003년 처음 AI가 발생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I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 확산 등에 대비한 세부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시행·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우선 해 주시지요. 질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이병욱** 하여튼 대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해서 총리실이 주관해서 농림수산부하고 저희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얘기들은 작년 상황이 아니고 그전에 매몰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서 대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 정부종합대책 이런 것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두아 위원** 그리고 또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법 수질오염 측정 조항 아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이두아 위원** 18조에 있는 규정에 보면, 이 규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 우려 지역과 일반 지역에 대해서 지난 2003년 처음 AI가 발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단 한 차례도 증설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지금 증설 안 하고 있다면 환경부에서 매몰처리 이후에 사후처리와 관련해서 임무를 해태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아주 미세한 지역의 측정 용도가 있고 전체 지하수 흐름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는 우리나라 지하수

전체 레벨이라든가 오염도를 보는 거고, 지금 AI 관련되는 것은 아주 특정한 지점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 이번에 환경관리공단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지하수를 네트워킹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하수까지 다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래서 그것은 별도 조사를 지금……

○**이두아 위원** 이런 지역은 따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산이 있으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이번에 발표된 자료가 그런 겁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또 저희가 1차년도 환경관리공단이 보고한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현재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에서 발생된 침출수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2조에 의해서 관리형 매립장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보고받으셨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위원** 이걸로 충분히 침출수라든가 이 지역의 상수도…… 그리고 매몰지역이 지금 어떤 데인지도 아시지요? 규정을 어겨서 농경지 근처도 있고 도로 인접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답답하게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후속조치를 어떤 걸 취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해명하실 기회도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현장에 가 보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워낙 이게 화급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려면 밑에 비닐 같은 것, 두꺼운 비닐을 한다든가 모양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이두아 위원** 석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석회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비용 효과적인 기술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환경기술개발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심지어는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활용될 수 없는 기술이라서 제가 그 뒤에 가능성을 자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아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즉각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환경부에서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에 드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러니까 농림부에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때 시점에서 조금 늦었다고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두아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대비를 하셔야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때 미비된 상태에서 닦쳐 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했다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이두아 위원** 그러니까 조류독감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나,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봐서 이게 감소 추세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증가 추세에 있으면 그때는 늦었지만 또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배출기준을,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게 환경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두아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상수도도 지금 국고지원금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사실 음용수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현재 상수도 보급률, 여러 분이 언급하셨지만 이것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 낙후된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받을

해 먹는다는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에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매몰지역의 영향이 침출수가 있다면 거기까지 영향이 미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침출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10월에도 보고가 1차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짬 나오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보완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하수 대체를 위해서 상수도 예산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아마 인입 구간 다시 말해서 메인 관에서 자기 집으로 수도꼭지 연결시키는 부분이 돈이 들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농민들이 어려워서 못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워서 이번에 행안부가 나서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또 그게 되면 아마 집에서 우물 파서 먹는 이런 일은 대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공사가 상당히 다 돼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이유도 아마 이게 관계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고……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런 면도 있지요.

○**이두아 위원** 환경부에서도 기준을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에 드려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차관님이나 장관님 입장에서도 나가서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총리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 가지고 부처 간 협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워낙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빈발하기 때문에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두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환경부차관께서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상수도 보급에 관해서

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흥희덕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박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좀더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든가 좀 큰 단체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게 역사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윤** 이두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원진 위원** 이두아 위원님 AI 관련 질의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546억 쓴 거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전체적으로 쓴 것은 682억인데 나머지는 지자체 돈으로 쓴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마 작년에 나간 게 500여 억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까지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만약에 AI가 다시 온다 그러면 매몰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예산이 앞으로 한 수천억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동형 소각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용융 기술 그다음에 위생적인 이오나이저(ionizer) 개념으로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대안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미 R&D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어느 것도 아직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라서 기술적으로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이고, 다만 매립지 자체를 조금 더, 아까 지적하셨듯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은 08년도 발생한 부분만 조사한 거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08년도 들어간 것은 작년에 발생한 예비비로 해서 긴급 투입한 거고요. 그전부터 일부는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보면 03, 04년도가 234개소고, 01, 07년도가 131개소, 08년도가 381개소인데 총 746개라는 얘기도 있고 1000개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현재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722개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물부에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AI뿐만 아니고 가축전염병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매몰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누적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다. 특히 먹는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 그렇지 않고 자꾸 매몰로 가면, 지금 이것 처리하는 데도 아마 수천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 들어가고 또 매몰하고 그런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융 방법도 좋고 소각 방법도 좋지만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거다, 앞으로 보면,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조원진 위원** 또 한 가지는 각 부처별의 역할 분담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매몰하고 매몰지역 정하는 것은 농수산물부에서 하고 환경부는 나중에 환경오염 되고 나면 뒷북 처리하다 바쁘고 말이지요.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예를 들어서 꼭 매몰을 해야 되면 매몰지역을 미리 선정을 한다든지, 저는 매몰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조원진 위원** AI 부분에 대한 것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예산액 부분은 올 정기국회 예산 때 좀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낸 내용 중에서 보고서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조원진 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정책 부문에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해서 27억 66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월이 14억 2900만 원, 불용액이 5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하고 불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대기 쪽의 일부 시점의 차이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아마 지자체의 매칭펀드 문제, 일부는 또 세입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낙동강 취수 가능지역 조사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것은 제가 확인을……

○**조원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인데, 27억 6600만 원을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4대강 사업 때문에 상수도에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대구 지역 밑으로 해서 약 1000만 명이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취수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급하게 투입해서 지금 이 조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긴급한데 이월하고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취수원 이전, 먹는 물 문제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체 수원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사실은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조원진 위원** 4대강 사업이 일시 전면적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고려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이월이나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조원진 위원** 7페이지 보시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성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조원진 위원** 사실은 하이브리드카가 제가 몇 번 지적을 하지만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예산을 넣어서 국가에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산 정말 잘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안 되는 생산 공장 보고 돈 쥐가지고 하라니까 되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잘못 가는 거지요.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공해 경유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유의 질은 굉장히 우리가 좋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가 지금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각 정유회사들의 이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왜 LPG를 자꾸 주장하고 LPG로 가야 되고 하이브리드카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 경유자동차의 수준이 또 경유의 질의 수준이 저탄소에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을 놔두고 잘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면 좋지 않겠나이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전기이륜차 부분의 배터리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성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환경부하고…… 지금 LG나 삼성 쪽에서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개발하고 공급 계약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나 GM하고 하고 있는데, 배터리 기술이 한국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배터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부분이 나빠서 전기이륜차에 고장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좋으면 화물을 많이 실어도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자동차 쪽으로 가기 보다는 자전거를 가지고 몇백 킬로를 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자전거 도로 만든다 하는데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전기이륜차 부분은 우리가 좀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의 배터리를 배터리 공장 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배터리를 공급해 주고 중국에서 조립을 해 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큰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4대강 수계관리기금 부정, 2009년도 1월 달에 영산강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게 뭐 크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조그만 사범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가다 보면 팔당 지역에 토지 매입하고 가짜 집 지었다가 팔고 이런 것 있습니다. 그것 자세히 좀 파악해서,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으로 짓고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 없어질 건물을 지어 놓고 그것을 건물로 해서 토지 배상해 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감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마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상청장님, 켄 크로퍼드(Kenneth Crawford)입니까?

○**기상청장 전병성** 예.

○**조원진 위원** 예보관님이신데 이분의 역할이 선진화추진단장이시고 기상 선진화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상청장 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기왕에 모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상예보관 분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아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의 도움을 잘 좀 받으셔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기상선진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보관 역량 향상 그리고 기상 시스템 개혁에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소속의 김재운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차관님, 예산을 자기 주머닛돈 쓰듯이,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불용, 전용, 과다한 이월, 이것 괜찮습니까? 도대체 환경부 예산이……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 10억을 증액해서 102억 예산 확정하는데, 더 늘려서 더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예산 20억 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쓰지 않는가, 이것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의 경우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266억 중에서 23억 9000만 원 증액해서 의결했는데 환경부는 여기에서 무려 80억 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했어요.

그리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종합관리사업의 경우도 2008년도 예산 37억 7100만 원 제출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34억 1200만 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또 끌어다가 1억 8500만 원 전용해서 더 추가해서 쓰지 않는가, 이것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예산을 수립한 정부하고 집행한 정부가 다른 것이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지적하셨듯이 미세한 사업 중에 일부 전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재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 충분히 협의를 했든, 그리고 국회에다가 당연히 요청을 해야지요. 상임위…… 그러면 국회는 허수아비입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김재운 위원**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감했으면 거기에 충분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 부분은 수시로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환경부차관 이병욱** 일단 전용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영똥한 데 쓰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고 집행합니까?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행정부만 있지?

○**환경부차관 이병욱**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김재윤 위원**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말이지요.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이 다 바뀐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게 된 주 요인이 됩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이렇게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원래 집행을 계획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경직성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또 하나는 지난 2008년도는 경비 10% 절감 이런 노력 때문에 상당 부분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윤 위원** 예산 절감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쓰라는 것이지.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감한 거는 특수 목적의 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경상경비 쪽에서 많이 절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환사업에다 좀 활용하는……

○**김재윤 위원** 경상경비에서 절감한 게 아니에요, 사업비에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전용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1조 4036억 원을 쏟아 붓고도 하수도 처리시설 재이용률이 왜 10.8%밖에 안 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것은 재이용률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 관망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지 그거 1조여억 원이 재이용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이용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관망하고 처리시설 만

드는 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하수도 처리시설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데요, 평균 가동률이 70.9%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국 348개 중에서 40% 미만인 것도 140개나 되고,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아마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처리시설이 완공이 된……

○**김재윤 위원** 보고만 하면 됩니까? 뭔가 개선할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처리시설 완공 이후에 관거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관거 정비에 대한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처리시설 자체를 작게 지어 가지고 나중에 처리 못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다소 규모가 크게 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혹시 2008년도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사업이 있었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희 별로 없었고요, 지금 연구하는 차원의 사업들이 주로, 대부분이 연구용역 수준 정도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수질개선사업 3조 9000억 원, 그 예산 중에서 물관리 계획 및 오염저감 계획 세부 내역을 보면 극히 일부만 신규사업이고 모두 계속사업인데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2008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2008년도는 원래 하수도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환경부 사업은 사실 추가된 것은 총인 사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총인 사업은 어차피 녹조 문제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지속적인, 해 오던 사업을 시점만 조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재윤 위원** 제가 지난 4월에 4대강 사업의 목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수치를 만들어 준 곳이 바로 환경부 즉 환경과학원이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수질예측모델 입력조건자료 인풋 데이터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이 제출한다고 답변했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내역을 보면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무리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어떤 부분……

○**김재윤 위원**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

○**환경부차관 이병욱** ……

○**김재윤 위원** 이것 담당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결산내역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됐느냐 이거지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이성환** 수도정책과 과장 이성환입니다.

9월달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보완 중에 있나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이성환** 아니, 용역이 9월에 마무리 작업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보고서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경제성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이성환** 취수가능지역은 강변여과수라든가 이런 취수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폐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김재윤 위원** 이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이성환** 100%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윤 위원** 100%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 이거지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이성환** 예.

○**김재윤 위원**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전용을 해서 추진하였는데, 과다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환경관리공단의 집행 내역을 보면 환경부로부터 27억 7600만 원을 이전받았고 그다음에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2500만 원 이월하고 5억 6800만 원을 불용했어요. 이래서 실집행 내역을 보면 전용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비가 20억 7700만 원으로 본 사업비 21억 5600만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월 사업비가 14억 9000만 원, 불용액이 5억 6000만 원 발생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차관님?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문제는 아마 당초 계획했던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김재윤 위원** 청와대가 4대강 정비사업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 예산 어떤 데든 때어다가 하라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이유가 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당시는 취수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점상 그렇게 연초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되고 불용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과장은 관련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4대강하고 관련 있지만……

○**김재윤 위원** 과장하고 차관 달라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취수원 대체 문제는 강변여과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재윤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 기상청도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전병성** 예,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상청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환경부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환경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강성천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박대해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그리고 김재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각각 있었습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차관님과 기상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사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대체토론을 마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인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과 곧 대체토론을 실시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사용명세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노동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고용 창출 역량 약화 등으로 인한 고용 유지의 필요성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고용 안정망 확충이 더욱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착, 차별해소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더 많은 고용기회의 제공과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 투자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등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5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인 30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9540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20억 원이 포함되어 총 9660억 원이었으며 이 중 95.1%인 9188억 원을 지출하고 163억 원은 이월, 나머지 309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11조 7377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조 4691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573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544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805억 원 등 총 20조 2990억 원을 조달·운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의 집행을 통하여 첫째, 고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는 물론 이들이 조속히 일자리를 찾도록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지원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다. 노동부 소관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나. 노동부 소관

해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하여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등 장·단기 청년 고용 대책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남녀 고용 평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연령 차별 금지 법제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고 중증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의 전달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하였으며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넷째,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의 확립, 노사 당사자 간 자율 해결,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침으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 대화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동 현장에서의 법 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법률 구조 활동 등을 강화하여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재 취약 부문 재해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및 고용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질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과 일자리 부족 문제, 노사관계 선진화,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활력을 가져오게 하는 등 중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서비스 확충 및 직업능력 개발 선진화를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섬기는 노동 행정으로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입니다.

박화진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입니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입니다.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정철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성기 국제협력관입니다.

문기섭 대변인입니다.

장화익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노동부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김재윤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지금 아무리 결산 국회라고 하지만 노동부가 100만 해고 대란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 연장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고 지금 이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최소한도로 지금 오랜 시간동안 이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과 국회에서 엄청난 소모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하고 그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노동부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라든가 아니면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희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재윤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오늘 지금 이 회의는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적어도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전부 세입세출결산 관련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임위는 물론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자리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노동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논쟁과 그리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에게 말씀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김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까요?

○**委員長 秋美愛**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장관님께서 지난 상임위 파행 이후에 사실은 위원장인 지나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과 또 사후 이 법 시행 이후에 필요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 해서 회의를 좀 갖자고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또 회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장관께서 오셔서 보고해 주리라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한 만 두 달 만에 처음 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이 인사말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재윤 간사님께서 인사말의 기회에 아마 그러한 유감 정도의 표명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게 생략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으로 결산 관련한 취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따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기획조정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 및 인원 현황 그리고 재원 규모, 예산 결산, 기금결산,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황 그리고 성과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쪽의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본부 495명을 포함해서 모두 5726명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10개 공공기관에 1만 112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3쪽입니다.

회계연도 재원 규모는 현액 기준으로 총 21조 2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064억 원, 특별회계는 596억 원, 기금은 5개 기금이 20조 2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이르는 예산결산 부분과 16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이르는 기금결산 내용을 포함해서 35쪽의 이들 내용을 포함한 성과평가 부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평가입니다.

우선 세입 부문입니다.

2008년도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4%로 전년도보다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과다 광부 적립금 국고귀속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 신규 세입 요인 발생에 기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수입과 과태료 수입 수납률도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률도 124.7%로 전년도보다 47.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채권 확보, 거주지 확인, 부동산 매각 유도 등 다양한 수납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체납액은 결손 처분을 통해서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 부문에서 예산 현액 9660억 중 9188억 원을 지출하고 163억 원은 이월하고 309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5.1%는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실적입니다.

이는 주로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집행 부진에서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월액은 43억 원, 불용액은 98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월액의 증가는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84억 원, 청사관리 23억 원 등의 연도 이월액 증가에 기인했고, 불용액 증가는 공무원 등 인건비 미집행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주요 사업비의 집행 실적을 매월 관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서 예산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집행 실적 점검을 통한 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지원 기간의 연도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입니다.

먼저 37쪽입니다.

고용정책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현액 2141억 원 중에서 2102억 원을 집행하고 2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6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 성과는 고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용 도모로 서비스 제고, 노동시장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 나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8쪽의 2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집행 실적은 예산 현액 2844억 중에서 2693억 원을 집행하고 97억 원은 이월하였고 53억 원은 불용된 상태입니다.

39쪽입니다.

성과를 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을 구축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인해서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훈련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취업률도 전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근로기준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현액 109억 중에서 101억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은 이월하였고 8억 원은 불용 상태입니다.

40쪽입니다.

근로기준사업의 사업 성과는 사업장 감독, 근로조건 자율점검 실시로 근로조건 개선 유도, 체불청산지원팀을 확대하여 임금체불 및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등 취약계층

층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사협력사업의 집행 실적은 예산 현액 289억 중에서 281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원은 불용된 상태입니다.

노사협력사업의 성과로는 노사협력 선언이 확산되고 체계적·효율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을 이루고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를 유도하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이루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번 고용평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15억 원 중에서 314억 원을 집행하고 4900만 원은 불용된 상태입니다.

42쪽입니다.

고용평등사업의 성과로서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취약계층의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정체 상태입니다.

43쪽의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5억 원 중에서 전액을 집행한 상태인데요.

2008년도 재해율은 0.71%로 전년 대비 0.01%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예방 전략으로 예방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4쪽, 이제는 기금 부문입니다.

우선 수입 부문입니다.

2008년도 기금은 5개 기금의 총규모는 징수 결정액이 19조 8811억 원이고 이 중에서 18조 645억 원을 수납하고 1조 5842억 원은 미수납, 2324억 원은 불납 결손된 상태입니다.

기금별 수납률은 장애인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기금 순인데 이는 주로 부담 주체, 즉 수입원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금재정의 안정화와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각종 보험급여, 지원금·장려금, 체당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 대행 협정을 지난 12월에 체결하였고, 인터넷 납부 및 보험금 상계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 관리 그리고 기금운용계획과 여유자금 투자

계획의 연계성 등을 강화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출 부문입니다.

2008년도 기금의 전체 지출 실적은 18조 645억 원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89.1% 수준입니다.

기금별 사업비의 지출 실적은 9조 8483억 원으로 계획 현액 대비 97%를 지출했습니다.

기금별로는 계획 현액 대비로 임금채권기금이 99.8%, 장애인기금이 98.6%, 고용보험기금이 97%, 산재기금이 96.8%, 근로복지진흥기금이 93% 순입니다.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설계를 보다 더 촘촘히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법정경비인 의무지출금 추계를 정확히 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금 사업별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인데요.

실업급여사업은 계획 현액의 99%인 3조 174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47쪽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획 현액의 93%인 1조 8015억 원을 지출했는데, 고용안정사업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등 해서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48쪽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요 실적은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 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 초기업단위의 훈련컨소시엄, 핵심 직무능력 향상 등 중소기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업자 훈련에 훈련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체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9쪽 하단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다섯 번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변경 사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비 부족 및 여유재원 활용, 절감액 활용 등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장려금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

해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산재기금입니다.

산재보험사업의 주요 실적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요양·재활·복지사업 등 산재보험사업에 3조 6555억 원을 지출하고 122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재예방사업의 주요 실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재정지원사업 등 산재예방사업에 2648억 원을 지출하고 102억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다각적인 산재예방을 통해서 재해율이 전년 대비 1.4%, 0.01%포인트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52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네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예컨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그리고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수요 증가, 위탁사업장 증가에 따른 위탁비용 증가 이런 부분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과거 실적치를 심층 분석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실적이 전무한 요양비 대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사업비는 지출 계획 현액의 99.8%인 2086억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산된 기업의 퇴직 근로자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4만 4100여 명에게 지급해서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4쪽 장애인기금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795억 원인데요, 내용은 서면으로 같음하고, 55쪽 하단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했는데 변경 사유는 자영업 전대지원사업의 예산 과목 변경, 절감 예산의 활용을 위한 목적 그리고 융자계정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충당 등으로 변경했는데요.

향후 집행이 부진한 공공훈련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 사유를 분석해서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 그리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도 도입 등을 통해서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6쪽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2806억 원이고요, 57쪽 하단을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을 일곱 차례에 걸쳐서 비교적 많이 빈번하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사유는 경기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사업인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사업 증액 그리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차입 원금 상환액 증액, 기타 위탁사업비 이런 용도였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향후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통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자 합니다.

58쪽, 59쪽에 있는 2008년도 신규 그리고 종료 사업 현황은 서면보고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 내용을 준비된 요약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검토한 결과 노동부 세입 예산액이 과소평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2008년에도 세입 예산액이 징수 결정액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 중 특히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검토한 결과, 제일 하단입니다, 전년도보다 집행 실적은 저조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 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하며 정부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률인 96.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사업별 지출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고용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노사협력사업과 기관운영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는 75억 원을 절감하여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전용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약 720명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었는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 전용은 적절치 못한 예산의 운용으로 보입니다.

해외취업알선사업의 2008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4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여 8154명을 알선하였으나 실제 취업은 313명으로 알선 대비 취업률은 이전 연도의 취업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의 2008년 예산액은 전년도의 67%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실적은 80%에 불과하고 취업률도 11.8% 수준으로 타 훈련사업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자영업자들의 훈련 참여 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야간 개설 과정 및 인원은 계속하여 감소되고 있으나 재직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야간 과정의 개설 학과 및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행정연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노동행정교육, 학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 부문 노동교육과 노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은 중요한 사업 영역이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사업 중 주 40시간제 도입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약 42만 개의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제도 홍보 및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증액하여 교육 인원의 대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책사업 중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의 323%를 자체 조정·증액하여 당초의 지원 대상보다 확대된 지역노사민정협의체에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중간입니다.

산재예방사업의 산업재해 동향을 보면 2008년

도 전체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는 2007년도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7조 9609억 원으로 나타나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국가적 중점 추진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의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금 전체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89.1%를 집행하였는바, 실적 저조의 원인은 고용보험기금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위주의 투자를 대폭 줄이고 2년 이상 장기투자 상품으로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2008년 회수액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7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자적 지위뿐만 아니라 동 기금으로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모성보호급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전담 부서의 설치 등 운용관리체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창출지원금의 세부사업인 중소기업시간단축지원금은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49억 59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경우도 당초 예산 230억 원 중 93억 4800만 원을 감액 변경하는 등 당초 기금계획과의 차이가 나타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에 있어서도 전체 지원금의 23.4%를 지원받는 데 불과하므로 노동부는 중소기업, 특히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 훈련에 대한 홍보 확대 등으로 사업주들의 직업 훈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직실업자 훈련은 당초 전직실업자 6만 8240명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1733억 원의 기금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좌제 시범 실시를 위하여 10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훈련 실적은 7만 565

명으로 목표를 추가 달성하고도 예산의 12.3%에 해당하는 226억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예산의 편성 시 보다 치밀하게 예산을 추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중간 하단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사업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고용컨설팅 사업은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리진단을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 9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나 지원사업장별 장애인 고용창출 세부 실적을 보면 그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전체적인 지원사업장의 고용 창출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보험급여사업 중 간병급여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0년 7월 1일 이전 치료 종결자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법 개정을 반영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138억 1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상단입니다.

산재근로자재활사업 중 후유증상 진료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사업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변경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11월 20일 이전 청구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2009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사업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단입니다.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사업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 반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잠수입으로 처리되는 등 정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부족이 생길 경우 출연금의 다른 비목에서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운영에 부담을 주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 상단입니다.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에 있어서 건축공사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2007년도 설계비를 이월 후 재이월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예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2008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징수 결정액의 실제 수납률은 45.9%에 불과하여 수납률을 높이

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지원 인원 및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승소율이 2008년 기준으로 96.7%를 기록하는 등 2005년 사업 시작 이후 체불근로자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활성화에 맞춰 예산 증액이 뒤따르지 못하여 200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지원금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공단의 사업 집행 및 기관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2004년 고용장려금 단가 인하 등의 개선 노력을 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기금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기금의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의무고용률·부담기초액 및 장려금 지급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기금 재원의 다원화 및 재분배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2008년 120억 원으로 축소되어 기금 운용 및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을 통한 일반회계 전입 및 복권기금 전입 확대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08년 노동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준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준선 위원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출신의 한

나라당 박준선 위원입니다.

이영희 장관님을 비롯한 노동부의 실·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질의에 앞서서…… 한 20개월 되셨지요, 장관하신 지?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1년 7개월 정도니까 제가 개월로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설니홍조(雪泥鴻爪)’라고 혹시 아십니까? 소동파의 시구에 나오는 말인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눈 위의 기러기 발자국……

제가 서른 살에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직이라든가 인생을 비유한 시구였는데, 어쨌든 공직이라는 것은 눈 위의 기러기 발자국처럼 조금만 눈이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어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한 20개월 가까이 이명박 정부의 첫 노동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아주 잘하시고 가셨는데 벼슬이라는 것이, 공직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진짜 눈 위의 기러기 발자국처럼 덧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끝나는 마당에 좀 그렇지만 저는 한 1년 반 이상 이영희 장관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첫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정책을 잘 수립하고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노동부에 있는 여러 공직자들과 접촉을 해 보니까 장관으로서 조직의 총수로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장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예산을 절약해서 그 중에서 102억 원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전용 재원으로 마련해서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활용을 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액 111억 중에서 2배 가까운 액수를 썼는데 과연 그 예산의 쓴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좀 의문

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실무 국장이 우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준선 위원** 그러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각 부분에서 10%씩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100억 이상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 중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 6억 5000만 원, 외국인취업자관리사업 1억 3900만 원, 그래서 사업 간 유사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저희는 작년에 정부출범을 하면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예산절감액을 활용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가재정법상 유사한 사업의 기준을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는 취지인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사업 확장에 이어서 해외취업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2009년 5월 말 현재 취업률이 16.7%에 불과하다, 이 사업 예산을 한 200억 이상을 썼는데 사업 실적이 별로 안 좋단 말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박준선 위원** 통계에 보니까 싱가포르나 호주의 국제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10명이 쓰고 있는데 해외취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등 해외 취업자 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이 사업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확대할 때는 그 전년도까지의 취업률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을 한 이후에 08년 하반기 9월부터 세계 금

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해외취업 실적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그 취업률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사업의 경우 연수사업에 취업자가 없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09년 5월 기준으로 파악해 볼 때 취업자가 전혀 없는 사업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성격이 해외취업 연수를 3개월 내지 12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실제로 해외취업까지 이루어지는 데 통상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의 경우에도 취업자가 다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 통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해외취업 연수사업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7년도 이전까지는 중도에 탈락하면 연수비를 환수하는 제도가 있었다면서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폐지됐고?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박준선 위원** 그 폐지가 중도 탈락을 좀 만회할 수, 동기를 좀 약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 아닌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그 환수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그 당시의 환수제도는 만약에 연수생이 연수 과정에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그 이후 분 연수비를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연수 시작 때부터의 모든 연수비를 환수하다 보니까 너무 가혹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고요.

중도 탈락률이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요인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선 08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해외취업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연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연수 취업 시에 정부 국비에서 300만 원까지 연수비용을 부담해 주긴 하지만 개인 부담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정에, 국가에 따라서 4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개인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연수 개인비용 부담이 연도가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작년의 경우에 상당히 해외취업 여건도 나빠진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가지고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해외취업사업 예산에 우리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참 취지가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예산을 200억 이상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해외취업 하는 나라 거기의 노동시장 현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서 거기에 가서 연수만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정도의 맞춤이 돼 있어야지 그저 보낸다고 한다면 거기서 취업이 되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어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지난 작년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폴리텍대학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번 잘 좀 해서 취업률을 9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십시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사업 부정 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이시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입니다.

○박준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용보험기금사업의 부정 수급액이 2008년도에 136억 원인데 그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부정 수급이라도 해서 이것을 좀 타 내려고 하는 건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박준선 위원 숫자로 25% 늘었고, 액수로는 거의 50%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예방책을 노동부에서 마련해서 자동경보시스템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만 지금 문제는 부정 수급이 적발이 됐는데 환수한 비중이 56%에 불과해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박준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주로 타 가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곤란하신 분들이 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환수가 그렇게 충분하게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노동부에서 그렇게 답변할 때가 아니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양반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정부기관에서는 국고가 새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받을 또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홍희덕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오늘 장관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관님이 앞장서서 불을 지켰던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입니다. 이제는 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현행 비정규직법의 다양한 효과 또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비정규직 100만 대란 해고설은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조차 처음부터 100만 해고대란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음에도 장관께서 끝까지 해고대란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나셨던 것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비롯한 공공 부문들이었습니다.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보다는 대통령과 장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충성 경쟁하듯이 비정규직들을 해고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장관님의 주장대로 비정규직법이 개악

되었다면 오히려 국가 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금의 840만 명을 넘어 1000만, 1500만에 이르는 그런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장관님, 이 기회에 그런 해고 대란설 이것 잘못 된 것이고 비정규직 개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장관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에게 짧게나마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홍 위원님 지적과는 생각을 좀 크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노위이기 때문에 좀 분명한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소위 100만 해고설이라고 할 때 제가 분명히 7월 달에 100만 명이 해고될 거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3월 달에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에 의해서 향후 1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 명이 고용 불안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향후 1년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한 달 사태를 가지고 우선 100만 해고설을 갖다가 없었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럼 한 달에, 7월 달에 몇 명이 해고돼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100만 해고설이 허위로 입증됐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께서 그렇게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그럼 됐어요.

다음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노동부가 국정감사 상황을 국정원에 보고해 왔고,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되고, 장관께서 사과하신 적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때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습니까. 생각나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본 위원이 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노동조합운영지도 예산 중 간담회비로 사용한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드러난 것만 국정원과 4번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당시 국감장에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한 10월 20일 이후에도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정책국 소속 사무관 2명이 국정원 및 경찰청 정보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은 무려 13명의 근로감독관을 대동하고 국정원과 만나 인천지역 노사관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장 등 3명과 국정원 정보관 3명이 노동조합운영지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비로 노동부 노동조합운영지도 예산 1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08년 7월 15일에는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6명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정보관 등이 노사지원과 회의실에서 노사분규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진 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고 18만 5000원의 노동부 노동조합운영지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2008년 11월 12일에는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13명이 국가정보원 조정관 등 3명과 인천지역 노사관계 대책을 협의하고 유관기관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30만 5850원의 노동부 노동조합운영지도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2008년 12월 17일에는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정책국 소속 사무관 2명과 경찰청·국정원 등 3명이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후 14만 원의 노동부 노동조합운영지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할 말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노동부에서 그동안 우리 노동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정원과 무슨 업무 협조를 공식적으로 했다가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돼서 제가 좀 알아 봤더니 공식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 그런 지역 사정에 따라서 말하자면 인사 차원에서 한 번 회식을 했다든가 이런 정도 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노동부 예산으로 만난 목적과 이런 것들이 서류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부인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만난 사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공식적인 무슨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고 지역 상황에 따라서 뭐랄까요 서로 아무래도 관계기관 간에, 단지 국정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 여러 기관 간에 서로 교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희덕 위원** 장관님, 작년에 약속하셨잖아요? 장관은 당시 위원들의 질의에 국정원과 서로 협력하거나 회합한 일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국정원이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데 관여하는 바도 없고 정식으로 업무에 협조한 일도 없다고 했어요. 사안별로 만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파악한 것도……

○**홍희덕 위원** 그런데 국감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있었잖아요? 그런 사실이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됐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국정원이 도대체 그렇게 한가합니까? 국정원이 노동조합 운영·지도와 관련해서 노동부와 어떤 협의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번 4건은 노동부가 먼저 업무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관님 말씀따라나 그냥 뭐 만나서 그렇게 국가 예산으로 식사를 하는, 목적 없이 이렇게 만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엄격하게 말하면 특별하게 의미 있는 공적 지출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다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적인 지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분명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홍희덕 위원** 노동부 예산을 지출하는……

좀 들어보십시오.

간담회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간담회 계획서를 만들어 결재 받고 간담회 후에 결과보고서 제출하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간

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홍희덕 위원** 이번 국정원 업무 협의…… 간담회 계획서와 보고서를 포함한 것들을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했더니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제출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번에 확인된 국정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노동부와의 업무 협의는, 저는 이것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공안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국정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런 회합 하는 게 맞는 거냐,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출석시키고. 이번에 발각된 노동부와 국정원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노위 차원에서 국정원과 노동부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나 하면 국정원의 업무가 분명히 규정되고 있고요. 지난날에 민간인 사찰, 무슨 노사관계에 개입했던 그런 것, 정말 나뉘던 국가에 해악을 끼쳤던 그런 기억들이, 망령들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떠나가는 장관님께 제가 좀 야박하다 싶지만 정말 저는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공안 당국들의 그런 폐해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도 홍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앞으로 우리 노동부가 많이 유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그런 업무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푸시(push)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쳤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화수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한 20개월 가까이 노동 행정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이행강제금이라고 아시지요? 별안간에 생각 안 하시나요? 부당 해고가 인정됐는데 사업주가 복직을 안 시켰을 때 2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 이것도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얼마씩 줍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육아휴직 급여……

○李和洙 委員 50만 원씩이거든요. 별안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장관님은 잘 모르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범위가 넓으니까 제가 숫자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李和洙 委員 노동 행정의 수장을 책임지면서, 밑에서 보좌를 잘 해 주어야 되거든. 저도 노동 운동을 30년 이상 했어도 법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보좌관들이 챙겨 주고 그러거든요.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게 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거다. 우선 노동 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으로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려를 하고 미리 사전에 대비를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통계를 잘못 잡았다거나 그래서 뭐 100만이다, 아니면 70만이다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내가 또 실업자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래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노동 운동만 해 왔는데 이것은 70만이다, 100만이다 이렇게 실업자가 발생을 안 한다. 회전문 인사다. 10명 내보내면 7명, 8명은 채용하고 그리고 한 두세 명 해고되는데 그렇게 많이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관님을 보좌하는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이 통계를 잘못했다…… 기왕 그만두시더라도 이것은 문책을 좀 하셔야 돼요. 장관님이 산술적으로 뭐 70만이다 100만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신 게 아니거든. 그러면 통계청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했건 간에 이것은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라도 노동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보

좌를 잘못해서 그 모든 책임을 장관님이 지시는 그것은 모순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노동부 산하 기관, 그다음에 노동부 고위직 공무원 다 계신데 다른 부처보다 좀 안이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 변화를 많은 국민들이나 노동자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만 두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 육아휴직 급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혹시 담당 국장이……

○李和洙 委員 예, 담당 국장이……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2008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꽤 많이 수립됐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100억입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

○李和洙 委員 그런데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모성 보호와 직장,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지금은 산전산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이 2001년도, 2002년도에는 150억이었다가 2006년 이후부터는 100억 원씩이 편성이 됐거든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전산후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급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100억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요.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100억 지원받고 있고……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고정되어

있고요.

○**李和洙 委員** 일반회계로 그러면 예산 수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일반회계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간 부담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서 저희들은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누가 출연하는 거예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그것 노동부 예산으로 이렇게 막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보험기금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아니,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법률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李和洙 委員**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李和洙 委員** 고용보험기금은……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노동자가 출연했으면 당사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남의 돈 갖다가 정부에서 막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냐 이거지.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여성 근로자들도 어차피 같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 다른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일반회계라든가 건강보험 쪽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을 거기에

지출하는 게 맞느냐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강구할 방안 있나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근로기준국장입니다.

○**李和洙 委員** 수납률 높이기 위한 방안은 좀 찾아보고 계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징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수납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꼭 받아야 되는데 기업주가 폐업하고 도산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징수를 못 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 결손 처리하면 끝나는 건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그런 경우에는 결국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방안을 좀 모색하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기왕 잘못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받을 거라면 확실하게 받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국가기관이 그런 것 법 집행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직업 훈련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빨리 나오세요, 지금 장관님은 답변하실 기분도 안 나실 테니까.

이게 전년 대비 사업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입니다.

신규 실업자 훈련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훈련 물량을 정부가 결정해 가지고 직업 훈련 기간

을 통해서 실시하는 경우인데 지난해 목표를 1만 7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만 700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보다 7.4% 많은 1만 8000명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기관들이 훈련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조금 부진하게 모집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계좌제는 9월 달에 가서 실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생을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금 실적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李和洙 委員 새터민 직업훈련 그것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것은 1인당 사업비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사업 성과가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38%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새터민 같은 경우는 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나마 좋은 많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05년도에는 취업률이 24.8%에 불과했는데 07년도에는 37.3%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새터민을 구인하려고 하는 기업체들하고 새터민들의 훈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 과정을 특화 과정으로 만들어서 저희 지방 기관들을 통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그래서 특화된 과정을 가지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재윤 위원님 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장관님, 2008년도 사업 집행율을 보니까 대구 재활병원 신축 집행률 제로,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49.3%,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49.6%,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6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사업 51.1%, 이렇게 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게 낮았는지는 저도

의아스러운데 좀 담당자가……

○김재윤 위원 담당 국장이 나와 보세요.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야겠네.

아니, 이게 국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는 100% 다 쓰라고 승인하는 거고요. 100%는 못 쓰더라도 70% 이상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거나 사전 사업 계획이 미비했거나 용역 발주를 제대로 못 했거나……

이것 왜 이렇습니까?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을 묶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각 사업별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김재윤 위원 아, 경제가 어려웠으면 더 빨리 빨리 집행해서 해야지요. 예산 집행을 더 철저하게 잘 하는 게 경제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집행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예, 추이 좀 정교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유의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윤 위원 시정하십시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예.

○김재윤 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보면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435억 중에서 59억 원을 전용해서 예산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이지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추진했어요.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59억 원을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9억도 못 쓰고 8억 원만 집행하고 19억 원은 이월됐어요, 32억은 불용되고. 실집행률이 13.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없는 전용을 한 것도 문제지만 전용했으면 제대로 쓰거나 하거나,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 국장이신가요?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우선 계좌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직업능력개발 사업 가운데 수행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김재윤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도 원래 여기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가운데에서 전용을 한 거예요, 59억 원을. 그렇게 썼으면, 59억 원을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했으면 제대로라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그 부분이 조금 늦게 시작된 측면도 있고 해서……

○**김재운 위원** 늦게 시작했으면 완료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계획을 세울 때에 비해서 시범사업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김재운 위원** 가정주부들도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니까 노동부가 매일 질타당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무려 323%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어요, 당초는 5억 6000만 원인데.

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보전금으로 당초 사업비의 179%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전용해서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지급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입니다.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구상해서 지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업은 국정 과제로 새롭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노동행정이 결국은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받은 포상금 3억 원 중에 2000만 원은 대구지방노동청 격려금으로 지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장 전운배**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약간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정확한 포상금 활용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생각해 보세요. 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줬다. 주었으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데 또 그것을 노동부 지방노동청 격려금으로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나오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김재운 위원**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양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2008년도 예산액이 111억 2900만 원이었는데요. 여기다가 갑자기 102억 6400만 원 전용해 가지고 쓴 이유가 됩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이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일률적인 예산 절감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김재운 위원** 결국 예산 절감해서 이 사업 썼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아니, 세상에…… 처음에 노동부 예산 세울 때, 노동부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의 원칙이 됩니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100% 다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김재운 위원** 어느 예산준칙에, 절감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미리 소모성 경비들 다 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러면 그동안 노동부는 소모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 편성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요구해도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제대로 편성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 편성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예산 절감을 해서 102억 6400만 원을 왜, 이 사업에 써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산 절감을 일률적으로 한 다음에 그 예산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 확충예산

75억 원이 해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전용됐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더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예산을 빼 가지고…… 또 예산 전용하고 더 플러스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 줄어들었지요, 720개나?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산……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번은 이렇게 갔다 한 번은 저렇게 갔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일률적인 지침에 따라 예산 절감을 한 이후에 국정과제 쪽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중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는 프로그램 내에서 전용하는 협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예산을 절감해서 취약계층에 가는 그 일자리가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자체를 예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용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렇게 줄었지만 실제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국장님,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예산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전용한 것은 절감계획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제대로 잘 세우고 잘 쓰고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러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위원님……

○**김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예요.

실업급여 재정 안정화하고 부당 수급 방지대책 왜 이렇게 안 세워집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부당 수급 많고 실업급여 재정 안정화 안 됩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 수급 전담 조사팀을 설치하고 또 2007년부터는 부정 수급 자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그 부정 수급 자동정보시스템을 2007년 12월하고 2009년 4월에 또 각각 추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 수급 조사관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원에서 부정 수급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서 하여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강성천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7개월 되돌아보시면 아마 회한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할 그런 기분도 아니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한테 직접……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분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답변해도 미래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또 고쳐야 될 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자들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기금 변경하시는 분은 어느 국입니까, 기금 변경?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2007년 결산 심사에서 노동부의 잦은 기금 변경은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제가 한 바 있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7년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전문위원회가 전부 7번 개최됐는데 실제로 회의가 열린 것은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6번은 서면으로 대체한 바 있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작년 결산 심사 때에도 본 위원이 이런 취지로 지적한 적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위원회가 3번 개최됐는데 3

회 모두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했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강성천 위원** 국가의 주요한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이시고 그리고 관계부처 차관 그리고 노사단체 대표 그리고 공익대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제 기억으로 2008년 12월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대개 어떤 단위사업에 대한 지출소요가 추가로, 소요가 예상돼서……

○**강성천 위원** 됐습니다. 그게 이유라고 대답하니까?

됐고요. 그런 식으로 노동부 내부에서 적당한 사용처를 찾아 내부 문서로 상신해서 여기저기 사용해 버리면 국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국가재정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 국가재정법 기준에 따라서 저희 노동부장관의…… 그러니까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노동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기준에 맞추고 또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잠깐요, 제가 하는 얘기는 회의를 거쳐서 심사해서 해야 되는데 서면결의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아니지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니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고용보험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몇 회나 자체 변경했습니까? 그리고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

까? 말씀해 보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지금 2008년도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모두 서면결의 했지요? 2번 다 서면결의 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제가 기준국장 오고 나서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강성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서면결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다 서면결의 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계속 그렇게 서면결의만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는 뭐 하러 만들어 났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성천 위원** 아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무슨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도 심의를 1회 개최하였는데 그것마저도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강성천 위원** 맞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강성천 위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경우 노동부 자체 변경으로 각각 1억과 60억을 증액하였지만 모두 그 금액 이상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이것도 맞지요?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

○**강성천 위원**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런 노동부의 바뀌지 않는 형태로 봐서는 결국 기금이 확보만 되어 있으면 노동부 내부에서 서면으로 자유롭게 변경하고 불용시

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 누가 나와서 하세요.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 이래도 너무 하잖아?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니, 그리고 회의는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회의체가 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도요. 어느 부처에 이런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반 기업에도 이런 일이 없고 어느 자그마한 구멍 가게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서면결의를 하더라도 위원 개개인별로 찬성·반대 여러 가지 사유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게끔은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취지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자, 이 기금이 말이지요. 이 기금이 근로자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노동부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금 쓰임새를 예측해서서 정성스럽게 쓰고, 국회의 심의권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이채필**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다음은 산재재활 쪽이 누구입니까? 나와 주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근로기준국장입니다.

○**강성천 위원** 지난 한해 동안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작년의 경우에 9만 5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얼마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9만 5000명……

○**강성천 위원** 산재근로자 수가요, 2008년에?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산업재해 발생해서…… 예.

○**강성천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그중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게 장애 판정을 받은 산재

장애인의 경우는 3만 7000여명 이렇게 됩니다.

○**강성천 위원** 받은 게 4만 4000입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제가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중 다시 원직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는 몇 프로입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장애 판정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 전체적인 직장 복귀 근로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 55%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는 조금 적습니다. 34, 3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건 잘못 아셨습니다. 10%입니다, 10%. 10%예요. 파악 잘 하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그것은 제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대다수 산재근로자들은 단 한 순간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사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산재근로자의 경우 치료뿐만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 게 저희들 산재보상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특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2008년 예산 150억 중 얼마가 불용됐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최종적으로 23억원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럼 작년 본사업 예산 중에 당초 계획예산보다 증액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당초 기금에 반영된 게 131억이었고 중간에 19억을 추가 반영해서 150억 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2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높

이기 위해 19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용한 셈이 됩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강성천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연도 중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 훈련신청인원이 많아 가지고 기금을 중간에 조금 증액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저희들 산재보험법 개정이 되고 법정급여로서의 재할급여제도가 생기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훈련수당 지급 기준을 종전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아마 그 영향으로 훈련신청인원이 하반기에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실시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작년에 최종적으로 한 4400여 명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4428명이지요.

그런데 훈련 수료자의 직업 복귀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그것은 최근에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 산재장해자의 직업 복귀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급여사업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설명 있다 하더라도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사업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급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훈련수당을 증액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직업 복귀율이 높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훈련수당 문제는 사실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산재장애인 중에 훈련수당만을 목표로 사실은 훈련을 받고 나서도 실 취업하고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도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훈련 신청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재장해인들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훈련을 받아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하다면 훈련수당 지급기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제대로 시행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강성천 위원** 잘해 주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장관님, 1년 6개월 계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1년 7개월입니다.

○**권선택 위원** 하여튼 이 정부의 초대 노동부장관으로서, 초대라는 의미는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권선택 위원** 또 후임자가 내정된 다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재직하시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각이 됐었고,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런 측면이 확대·재생산됐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표류·오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살려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런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홀가분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그동안 직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았고요.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권선택 위원** 예.

질문이라면 질문인데요 두 가지만 여쭙 볼게요.

혹시 장관님은 공직에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처음이었습니다.

○**권선택 위원** 1년 7개월 하시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다시 이 자리를 갖는다면 이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느껴 보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권선택 위원** 대표적인 것 1개만 말씀해 보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제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역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입법부 간에 좀 더 원활하게 국정운영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권선택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앞으로는 더 잘 하실 수 있겠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권선택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관님한테 이것 하나만 여쭙 볼게요.

일자리정책·일자리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이 3조 6000억 정도 되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총리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6개 부처에 224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그중에서 노동부 것이 51건으로 건수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사업이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예산 투자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물론 대중적인 요법이라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이다, 이게 과연 국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또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평가하고 측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체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보강이 되어서 좀 더 완벽한 일자리대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거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사실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은 하나 고용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깊이 인식을 하고, 향후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정책,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고용의 증대효과 같은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노동부에서 갖추기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바탕 위에서, 사실 이번 일자리는 경제위기가 당면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각 정부 부처에서 다소 방만하게 계획이 수립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종합적인·항구적인 계획을 노동부가 주관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같은 돈을 가지고 보다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부처 간의 중복사업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산의 낭비도 사실 많거든요. 그것이 어떤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후임 장관께도 이런 말씀 확실히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다음 결산사항은 실무자 국장한테 물어볼까요?

고용안정사업 누가 하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권선택 위원** 특히 고용안정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80% 미만이 9개로 파악이 돼 있고요. 특히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사업 이것 있지요? 이것은 예산 현액이 줄여 가지고 2억 6000인데 400만 원 지출했어요? 이 400만 원은 뭍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당초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사업은 08년 1월달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면서 산업계와 건설 노조의 건의를 받아서 건설업체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1개월 이상 고용하면 그 임

금의 3분의 2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공참여자제도가 사실상은 폐지되지 않고 건설업체에서 계속 일용근로자들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이 거의 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 정도의 금액만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권선택 위원 지출된 게 아니지요. 400만 원 나갔어요, 400만 원.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타당성검토가 잘못된 것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권선택 위원 내년도에 또 합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아닙니다.

금년에 이 제도를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바뀌지 않아서 실제로 집행률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새로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지금 사업자단체와 건설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과연 어느 정도 현실감 있는지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권선택 위원 요양비 대부사업은 누가 하시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근로기준국장 박화진입니다.

○권선택 위원 이것도 상당히 저조하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 거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권선택 위원 이게 취지로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이라든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사실상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재해 중에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을 판정을 하고 요양 승

인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본인부담금 등 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치료비 본인부담금 부분을 대부사업으로서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권선택 위원 내년도에 폐지합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이것은 그냥 폐지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산재보험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부사업을—용자사업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자사업하고 통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선택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존속시키는데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다음에 고용지원센터 취업박람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작년도 실버취업박람회 전 센터가 다 했지 않습니다?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권선택 위원 상당히 호응도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액 대비 취업자 수를 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어떤 데는 전혀 형편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작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성과를 낸 데도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연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그래서 지금 센터하고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박람회 위탁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박람회 할 때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앞으로 연계시키겠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볼게요.

다음에 해외취업지원사업 어디서 하시지요?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중요하다 해서 2008년도에 전용까지 해서 당초 예산액의 거의 배 213억을 썼네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102억을 전용했네요. 그러면 당초 예산의 거의 배거든요. 이것은 예산심의권 자

체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해외취업사업 예산을 전용할 당시만 해도 해외취업사업의 취업률은 나름대로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해외 노동시장 자체에서 신규채용이 동결되면서 취업률이 급격하게 하락됨에 따라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권선택 위원** 9개 사업을 끌어 모아서 만든 건데 그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런 미진한 점이 있지요?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권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조원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니까 잘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 전임자도 시행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에 잘 된다 하는 평가는 아직 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제 일단 기간제 부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노동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몇 개월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 우리가 한 30%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사에 의해서 본다면 한 37%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입니다마는 해고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과는 좀 달라졌는데, 잘 나간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탈출효과를 이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복수노조하고 전임자 부분도 시행을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복수노조 전임자도 법대로 시행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법 자체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것을 13년간이나 유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유예할 어떤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노동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우려스러운, 또는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사태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로 보서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빨리 안을 갖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님!

대한민국의 통계라는 게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고요. 또 통계청하고 노동부의 협조사항도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전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 할 때 기간제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혼란이 왔어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문제 말썽이 많은데, 문제는 통계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통계숫자를 가지고 이것이 잘 된다 못 된다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7월달에 말이지요, 지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비정규직의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숫자가……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계자료 갖고 오시고요.

7월달만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4만 4910명이 해직됐습니다. 고용보험의 비자발적 상실자라는 것은 해직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경과해서 해직된 사람이 1만 명입니다, 2년

경과해서.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로서 해직된 사람이 2년은 안 됐지마는 23개월에 해직될 수도 있고 22개월에 해직될 수 있고 7월 1일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해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7월달에 4만 4000명이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자발적 상실자가 통계숫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비정규직 얘기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통계로……

제 얘기 맞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맞습니다.

○**조원진 위원** 4만 5000명이 7월달에 비정규직 상실을 한 겁니다.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중에서 2년 이상 된 사람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2년 이상자만 해도 해고 숫자가 배가 는 겁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 이런 추세로 가면 말이지요, 7월에 계약기간 만료로서 해직된 사람 숫자는 제가 1월달부터 불러드릴까요?

1월달에 8만 6000명, 2월달 3만 5000, 3월달에 7만 5000, 4월 3만 1000, 5월 4만 3000, 6월 5만 2000, 7월 4만 4000입니다. 이것은 근로감독관이 가지고 전화로 하고 여론조사로 한 게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DB자료로 나오는 자료예요, 이 숫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명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결산에 대한 것은 서면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노동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간제에 대한 자료, 없습니다.

2007년도에 대통령후보 토론회 때도 모 후보자가 그랬습니다.

입법 잘못됐다 개정해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는 보완을 하고 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입장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잘못된 여론조사 이게 아니고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실적을 하면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돼 있고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숫자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를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1400개 기업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전화해서 오지 마세요 하는 게 300개입니다. 1만 4000개 중에서 1만 1000개 조사했어요. 그중에 전화로 조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로감독관이 인사담당자한테 전화로 물으니까 인사담당자 제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길게는 10월달까지 실업급여수급 조사내용 DB하고, 고용보험의 비자발적 상실자 DB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조사한 것을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해 보자 경찰 인구조사에 8월 달 조사하면 10월 달에 나옵니다. 그 네 가지 조사를 가지고 비정규직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따져야 된다, 결과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7월 달만 4만 4000명이 계약만료 해직됐습니다, 계약만료 해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잘못, 정치하는 사람들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시는 노동부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그 전에 비정규직에 대해 얘기한 것 즉 동영상까지 다 뿔아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는 그러한 격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쟁점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부탁드리는 게 우선 내년부터 말이지요, 통계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할 때 기간제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죠?

○**환경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통계청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어요.

이것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한 모집단이 나옵니다, 모집단이.

기간제의 모집단이 600에서 1000만 명입니다. 갭이 4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5인 이상 표본조사를 1만 개 기업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계속하시고, 세 번째는 행태도 있죠? 행태조사를 해 가지고 80억,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80억으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를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수노조·전임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선불리 시행을 하자, 선불리 유예를 더 하자, 이렇게 선불리 할 게 아니고 좀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기업 내에서도 복수노조 하자, 말자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 주시고, 나머지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지만 한 가지 말이죠.

우리 이재갑 국장님,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런 정책을 해 보자, 대통령이 정책을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올렸을 겁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해외 인턴사원 10만 양성해 가지고 각 부서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조원진 위원** 노동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실패라고 생각하면 접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해외취업연수 몇 % 지금 취업합니까? 한 22%, 23%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지금 현재 취업률이 한 22% 정도 됩니다.

○**조원진 위원** 해외취업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몇 프로 합니까, 4% 미만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해외취업 알선사업입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해외취업지원, 글로벌인재양성 이것 몇 프로입니까, 취업률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부서에 해외 관련 인턴사원제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조원진 위원** 다시 점검해서 오히려, 지금 전용한 게 사회적 일자리 전용 했는데 오히려 국내의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정책을 바꾸고 예산낭비를 없애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조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해외취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개선·보완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상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오랜만이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평소에 장관님의 전문성과 그리고 소신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장관님과 쉽지 않게 1년 반인가요? 보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큰 틀에서 지적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지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부가 총 24개의 세부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셨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24개 사업 중에서 사업예산이 이용 또는 전용돼서 예산현액이 줄어드는 사업이 11개, 늘어난 사업이 7개였습니다.

2008년의 예산절감 취지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약을 통해서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되는 데서 또 사업이 줄어드는 사업의 경우에 예산절감계획 취지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죠.

○**김상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들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75억, 취업예로계층 민간취업기관 지원이 27억 등 해서 오히려 이 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건 조금 전체적으로 평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줄인 부분은 그 사업 자체가 의의가 있지만 어떤 그 수행 과정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줄였다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을 줄여서 어디다 썼는가 하는 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75억을 해외취업지원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그 줄인 부분을 바로 그대로 해외취업지원 쪽으로 그대로 옮겼는지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갑니다마는……

○**김상희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예산투입대비 아주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해외취업알선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취업알선 대비 취업률이 몇 %인지 기억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조금 전의 얘기로 봐서는 이십 몇 %도 안 된……

○**김상희 위원** 아니에요. 3.8%에 그쳤습니다, 3.8%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희 위원** 3.8%입니다. 예,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대폭 전용한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런 성과를 냈는데요.

연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사업의 경우에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총 146억 원 예산 투입을 했는데요. 4163명이 해외연수기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말 현재 보니까 955명, 22.2%가 중도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713명만이 해외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정도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 예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침해하면서 이런 사업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글썄,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을 이렇게 전용하면서 증액되고 했는데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차원에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노동부가 저소득층취업패키지라고 해서 사실 새로운 부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 또 알선을 한,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또 그것은 경제불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사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 때 제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국민들과 약속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 공약사항은 또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외취업이라고 하면 젊은 청년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보다 진취적으로 취업을 말하자면 촉진시키기 위한 다소 좀 과일릿적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성과는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도 좀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짧아서요. 취지는 이해가 가나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진을 할 때는 부처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부처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정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유난히 정말 대규모 쟁의 사업장들이 많았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정협의회 운영지원이 당초 예산의 323%를 자체 조정·증액을 하셨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사민정협의회를……

○**김상희 위원** 예, 노사민정협의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대규모 쟁의현장이라든가 노사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

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 나누기의 어떤 고통분담……

○**김상희 위원** 경제위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노사의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323%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증액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그런 예산심의권을 아주 정말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자체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말 원활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진실로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시고 사업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에 변경 증액 후에 굉장히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여러 지적이 나온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총 25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16개 사업에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한 금액보다 불용액이 오히려 큰 것은 계획변경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사전 수요예측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한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동안 행정하면서 보고 느낀 겁니다마는 이 고용안정사업은 경우에 따라서 좀 플렉시블(flexible)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은 이미 좀 경직되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따라서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은 좀 더 했으면 좋은데 거기의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쪽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다고 할 때 전체 고용안정사업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다소 그 집행하는 과정에 좀 유연성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코 저희들이 예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의도는 없고요. 또 실제로 상당한 경우에 정확한 예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부산 연제구 출신 박대해 위원입니다.

이영희 장관님, 앞으로 또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서 아마 국회에서 마지막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패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것이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대해 위원**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08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으로 1397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집행률도 99.5%로 집행실적이 양호합니다. 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했고 실적도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자체 수익원 부족 문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2년간 1인당 83만 7000 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자체 수입으로 기업 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수익원이 적어서 자립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계약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동의합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 소홀한 게 또 문제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을 찾아보면 2009년 6월 현재 광역지자체 8개소, 기초지자체 5개소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법 개

정에 나서고 또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지자체에서 육성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부입찰 심사 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세부 시행계획을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사업,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금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정책적으로 가입을 적극 장려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가입과 임의가입 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의무가입 대상입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현재 제도상 의무가입 대상자는 5억 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와 200호 이상 민간주택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또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공사도 같이 포함되지요.

그런데 5억 원 미만 공사 등은 임의가입을 받고 있는데 노동부는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퇴직공제부금의 3분의 1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퇴직공제부금 지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08년도 21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절반밖에 안되는 11억 100만 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합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과거에는 퇴직공제

부금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 공사현장에 최저가 낙찰제가 확산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제부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임의가입 사업장들은 공제부금의 3분의 2는 사업주가 자기 부담을 하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3분의 1은…… 그런 것도 가입률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면 예산을 보다 적게 계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산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좀 과다 계상이 됐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할 때는 과거의 지출 내역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박대해 위원** 2007년도 집행실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사업의 2007년도 집행실적은 32억 3700만 원 예산 가운데 37.3%인 12억 700만 원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2008년도는 2007년보다 예산을 33%나 적게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현행 제도로 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처럼 다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재검토해 가지고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원 취지는 매우 건전한 것으로 차제에 임의가입을 없애고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대해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불용을 막을 수

도 있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은 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사업, 2006년 기준으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33.6%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16%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자영업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인데요. 영세 자영업자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약 600만 명쯤으로 추정됩니다.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인데요. 노동부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지원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그런 사업장에 한해서 하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20억을 계상해서 16억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2228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169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지원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의 취업률은 형편없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을 수료한 분들의 취업률이 11.8%에 불과합니다. 또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이보다 더 낮은 10.2%, 11.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취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우선 자영업자 중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한정해서 뽑아야 하는데 본인들이 구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직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목적으로 훈련을……

○**박대해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노동부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매년 성과가 10% 안팎인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전에 취업 희망 업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자영업자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인데 대학 교양수업 수준의 강의를 받을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사업의 취업률 올리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밝혀주시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우선 영세 자영업자 대상을 금년도 4월 달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대상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직종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소매업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이어 가지고 이쪽과 관련된 업종들을 좀더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면 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통해 가지고 취업처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직 의사가 확실히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전직 의사가 없이 자영업을 좀더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자영업 컨설팅과 연계되도록 해서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두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두아 위원** 조해진 위원님…… 바쁘신 대변인이시니까……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조해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수고 많으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별로 성과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노사선진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 노사관계는 선진화 이전에 우선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정상화를 이루고 또 보다 나은 관계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부터 상당히 이탈돼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노사관계가 기본적인 하나의 바람직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주로 거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선진화는 우리가 21세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의 선진국,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도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아직 적극적인 정책을 더 전개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환노위에 한 1년 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있어 보니까 그런 과제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 원론적으로는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공감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만 나서서 잘되지도 않고, 또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바깥의 큰 세력인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이런 파워 집단이 있고, 이 그룹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해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타협하고 씨름해 가지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차차선이라도 서로 합의를 이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것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정치권도 노력해야 되지만 부처도 많은 역량이나 정치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동부가 부처로서는 힘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 특히 이 노동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주변의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저는 ‘대타협’이라든가 ‘대화해’ 이런 얘기를 할 때 영어로는 하나의 컴프

로마이즈(compromise)는 타협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consensus), 진정한 하나의 합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그것은 각자가 자기 입장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때 컨센서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각 이해단체들은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하든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저는 아직 안 풀려가고 있는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정부 한 부처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하게 발전해서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정치권 또 의회가 통합해 내고 용광로처럼 녹여내고 걸러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역할에 제대로 충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임 장관 내정자 청문회 때도 그런 것을 여쭙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시끄러웠던,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정규직 문제가 갈등과 논란과 논쟁의 출발이 가만 보면 미래 예측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비정규직법이 시행에 들어갔을 때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직 근로자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어긋났거든요. 여야간에도 어긋나고 정부하고도 또 다르고 각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시각에 따라 달랐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되니까 처방도 틀리고. 100만 명이 나올 거냐, 70만 명이 나올 거냐, 30만 명이 나올 거냐, 아니면 아주 미미할 거냐 여기에 입씨름 하느라고 사실은 많은 시간을 이 자리에서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한 예측 진단이 나오고 나서 다툼 없이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논의가 집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부처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미래를 두고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성장 전망도 각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데 이번에 비정규직 해고 규모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 또 다른 기관에서

한 것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 의해서 주장이 자꾸 격차가 나서는 안 되고 그것은 수렴하기 위한 말하자면 충분한 그런 뭐랄까요,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서로 해 나가면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원만치 못했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미리 갖고 있지 못했고, 또 해고자의 규모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의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측인데 뚜정 열어보면 다른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서 해고자 규모를 가지고만 말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해고자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이 법에 의해서 정말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가 부당하게 생각한다고 보는 그런 해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우선 그것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 저희 노동부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르게 비판도 많이 받았습시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해고당할 위험성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게 일차적인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법 시행 전체를 볼 때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 비정규직법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보호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결국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과연 이 법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저희도 70만이나 100만이나 반드시 그런 실직 사태가 나온다고 장담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든 정부 부처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 몇 달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걱정했던 만

큼의 대량 해고는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아직은 그것은 단정할 수…… 우리 조사에 의하면 적게 나왔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적게 나왔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적은 숫자라도 하여튼 일자리 잃은 분들의 애환이나 고통은 정부나 여당이 감싸주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곧, 이제 이대로 가면 복수노조도 나오게 되고 노조 전임 임금 지급도 금지되게 돼 있는데 복수노조도 같은 대기업이라도 어떤 제조업체에서는 강성노조에 하도 시달려 가지고 노조가 좀 여러 개 됐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고 어떤 대기업 노조는, R&D나 이런 쪽에 노조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거라고 걱정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대기업은 노조하고 잘하고 있는데 새로 또 노조가 생기면 변수가 생긴다, 또 노조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강성…… 선명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또 위축될 것 아니냐 이런 불안도 있고, 또 작은 기업에서는 노조 전임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활동 자체가 존립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자면 지금 이 법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시행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문제를 간단히 답하기는 상당히, 너무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도, 정말 이 문제야말로 한 기업마다 자기 이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문제의 해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다 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 패러다임 시프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국제규범에 맞도록 가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만의 특수성, 어느 한 기업만의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어느 노동조합이 약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생존하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도 거기에 적응하리라고 보고 결국 노동조합도 자세 전환이 나와서 새로운, 바람직한 인디펜던트한 노동조합이 육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두아 위원** 장관님,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쉽게도 승계받아 들어와서 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사실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노동통계조사사업과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회를, 견해를 좀 밝히실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조해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조승수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2010년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5.5% 삭감됐다는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예산이 591억 원 감액됐고 이는 전년 대비 49.1%의 감액률이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게 직업능력개발사업 같은 데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의 2008년 예산액은 전년도의 67% 수준이었는데 예산 집행 실적은 8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에서 점점, 이렇게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데 그런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무 국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내에서 협의가 끝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행정부 내에서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년도 집행 실적 부진율, 불용액 사유가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사업의 경우에 집행률이 부진하게 되면 단위사업의 예산 책정을 할 때 그것이 감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더 큰 요인은 그것보다는 행정부 내에서 내년도 경제사정과 고용 상황에 대한 전망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내년도 고용상황은 금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만 평상시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규모도 추경예산보다는 축소되고 그다음에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증액되어 있는 한 중간선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여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하다가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답변을 마저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새터민 직업훈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시 인원이 772명인데 취업률이 32.6%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터민 직업훈련이 직업능력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여기서 따로 용어를 쓰면서 북한이탈주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터민 직업훈련을 보면 여기에도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시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도, 저보다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새터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

런 부분을 신경 써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전체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생존과 직결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터를 잡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하고 직결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신경 쓰셔야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앞으로의 인생, 그다음에 2세, 다음 후손들의 인생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폴리텍대학 쪽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북한이탈주민 훈련을 했을 때 중도 포기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있다면 사실 지금 새터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용액 같은 게, 이런 예산이 있다면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기초직업 프로그램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려면 젊은…… 청소년이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학 들어갈 사람, 아직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좀 더 다기능적인, 그리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불용액이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기초직업 프로그램밖에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하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원에 3개월간 입소를 하게 되면 2개월간은 우선 사회정착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월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대학이나 아니면 여자대학에 가 가지고 기초직업 적응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원에 입소하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 본인들의 취업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각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민간 직업훈련하고 연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직업을 얻음에 있어서 필요한 좀 더 심도 있는 직업훈련들은 거기에

서 3개월~12개월까지 긴 기간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불용액 관련된 부분은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훈련은 굳이 정수기능대학이나 폴리텍에서 하지 않더라도 민간 직업훈련에서도 같이 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민간 직업훈련원에서는 맞춤 프로그램을, 이분들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고 또 아시겠지만 저도 하나원에서 나오는 분들, 거기 계시는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 보면 그분들은 3개월 정도 갖고는 이 사회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고 모든 게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그분들이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적응하려면 그 3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민간 훈련원에서 해 준다면 맞춤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일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노동부에 안양지청이란 곳이 있는데 안양지청에서 통일부와 그리고 현대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아라코주식회사라는 곳을 연결해 가지고, 위탁급식을 하는 곳인데 5개월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16명을 시켰는데 훈련 결과에 따라서 14명이 취업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안양 이외에도 서울 남부에서는 도배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터민들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요. 경인청에서는 자동차 정비라든가 중장비 과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대개 08년도 같은 경우는 22개소 정도, 그리고 07년은 24개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면, 새터민들이 하나의 반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분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또 데려갈 기업체들의 수요도 같이 파악해서 특화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지금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하고 송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광역성을 이용한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 운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업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취업 준비 중인 사람들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면 진행 결과는 응답자 100% 모두 직업방송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업방송을 시청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이두아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연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07년도에 0.1% 정도 됐고요, 최근 들어서 09년 3월에 저희들이 잡은 바로는 0.182%였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해 규모가?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산은 금년도는 62억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한 40~60억 사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원래는 60억이 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이두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이 진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홍보 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그런데 직업방송 시청률을 다른 민간방송 케이블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드라마 방송을 재방송한다든가, 아니면 영화방송을 재방송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두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직업방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시청률도 문제지만 존재 자체를……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TV에서 3시간을 채널 임대해 해서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직업방송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문제돼서 이것을

독립채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독립채널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국인력공단으로 하여금 별도로 하고 50억의 예산을 정부가 들고 나머지 민간 투자업체들이 50억을 들여서 하게 해서 100억 원 규모로 별도의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TV를 빌려서 3시간을 임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8시간의 방송을 독립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고요.

직업방송의 0.182% 시청률은 사이언스방송은 0.04 정도 되고요, 복지TV는 0.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익채널로 비교하면 그렇게 아주……

○이두아 위원 공익채널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자의 100%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 존재 자체를 몰라서 시청률이 낮은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지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준비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행히 장관님께서도 출석하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아마 유종의 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야 간의 질의 가운데 공통된 것은 통계를 잘못 보지 않았느냐, 또 부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럼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공통된,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공통된 지적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100만 실업설을 얘기한 적 없다라고도 또 변명도 하셨지만 어쨌든 애초에는 대규모 실업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지나간 언론을 보시더라도 회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100만 실업설이 나중에는 70만 실업설로 줄어들었고 또 그것이 한꺼번에 7월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1년치 누적하면 차후에 순차적으로 2년 기간 도래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가 그렇게 70만 정도 실업 사태가 생길 것이라  
는 것은 끝까지 주장을 또 노동부가 했습니다.  
장관 입으로 하셨던지 또는 노동부를 대표해서  
하셨던지 어쨌든 그러한 주장을 꾸준히 해 오셨  
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이른바 ‘추미에 실업’이라  
고 바꾸어서 제 개인에 대한 정치적 비난으로 바  
꾸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태의 진원지는 노동부  
였습니다. 또 그 노동부를 진두지휘한 분이 바로  
장관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가 일단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예측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있다는 것  
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이가 조  
금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한 예측의 차이가 아니  
라 아주 큰 차이로 정책도 잘못 판단할 정도로  
틀렸다 하는 것도 여야 간의 지적입니다.

일단 하나의 통계로 노동부의 실업급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있었던 실업급여  
신청분이 9000명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있었습니  
다. 그중에는 정규직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신  
청했겠습니까만 전체 다 9000명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부가 말한 연간  
70만 실업설을 감안해도,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6만 명 정도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적실업  
70만 1년간 생긴다 하더라도 한 달에 6만 명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000명 실업급  
여 신규 신청자를 몽땅 다 비정규직으로 간주한  
다 하더라도 노동부의 예측과는 크게 틀린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예측과는 전혀, 노동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아무리 줄잡아도, 많이 잡아도  
2~3만 명 또는 2만 명 정도 생길 것이고 많이  
잡아도 한 3만 명 정도 생길 것 같다 하는 누차  
의 경고성, 노동부 정책 방향을 시정하려고 했던  
경고성 진단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 유일하게 노동부라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최근의 노동부 통계 발표를 우리  
국회에 들고 와서 보고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  
다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치 조사한 것이고 그 한 달 가지  
고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또 자위도 하십니다. 그  
러나 장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죽집게 점쟁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추세를 보는 것  
이지요.

물론 여론조사 틀립니다. 뚜껑 열리면 틀립니

다. 정치여론조사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보는 것이지요. 아, 그렇게 가서는 인기를  
계속 얻겠느냐 아니면 잘못을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시그널이냐 하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  
론조사도 필요하고 통계조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추  
세는 노동부의 장담하고는 전혀 반대이다라는 것  
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당에서도 장관님의 주장에 충실히 뒷받침  
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무리하게 일방적인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조삼모사라 할 수 있는  
법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행기간을 연기하자는  
거나 법 시행을 유보하고 유예하자는 거나 마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기본의 통계가 잘못되었다라는  
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들을 지  
휘할 책임은 장관이 있으시고요. 어떤 정권에서,  
어떤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생산자 주문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를 가지고 오라 그러  
면 A에 맞춰서 보고자료 갖고 오고 자료도 구합  
니다. 그러나 플랜 B를 갖고 오라 그러면 또 똑  
같은 공무원들이 B에 맞추고 B의 결과를 또 가  
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권이 바뀐 이명박 정부의  
최초의 노동부장관으로서 방향 설정하는 데는 대  
단히 중요한 위치에 서 계셨던 것인데 최근의 시  
장의 반응은 장관께서 지휘하신 그 방향이 잘못  
되었다, 전환하라 하는 시그널을 노동부장관께서  
잘못 보내셨고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정 거꾸로  
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시장의 선택은 원칙이었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었는데 그 법 시행에 따른 준비도 하지 않았  
고 또 시행 이후에 후속대책도 세우지 않은 노동  
부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방향을 바꾸  
어 달라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러  
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평가 이르다. 더 몇 개월 지켜봐  
달라’고, ‘지켜보자’라고 하시지만 비정규직이 가  
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는 시장 여건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불안해하는 것은 잘릴까봐, 자  
의적 해고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차별시정은 그다음 문제일 수도 있습니  
다. 차별시정을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예산

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비’자만 빼면, 법으로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까? 비정규직법 그런 타이틀, 그런 제목의 법 명칭 있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의 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비’자라는 말만 빼면 다 정규직이 됩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의적 해고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조금 더 차별적인 그러한 족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그다음 단계의 조치까지 해 줄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정책적 보호를 해 보자 하는데 아마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가 있어야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저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정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오히려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억하심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한 성실성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분보다 앞장서실 수 있는 분이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경제의 위기에서 더욱 어려워져 가는, 또 사회 양극화에서 가장 처참해져가는 그런 열악한 비정규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노동부장관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더 따뜻한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과 마인드가 필요했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또 제 개인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을 많이 퍼부었지만 저는 그러한 개인 비난 때문에 거기에 감정을 몰입해서 끝까지 장관님을 오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또 그것에 대한 피해자가 보호를 바라는 근로자 서민들이기 때문에, 또 저도 전면에 있어서 장관님과 어찌면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 제 어떤 해야 될 일 때문에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다를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노동부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에 대

한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는 박준선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권선택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서면답변 및 자료의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4일 개최하되 오전 9시부터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오후 4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부 및 노동부·기상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등을 의결하고 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13인)

강성천	권선택	김상희	김재운
박대해	박준선	원혜영	이두아
이화수	조원진	조해진	추미애
홍희덕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원창희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이만의
환경정책실장	홍준석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녹색환경정책관	안문수
대변인	윤용문
기상청장	전병성
차장	홍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김 상 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 장	조 춘 구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 재 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사 장	엄 흥 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 노동부	양 용 운
장 관	이 영 희
기획조정실장	이 채 필
노사협력정책국장	전 운 배
산업안전보건국장	정 현 옥
고용정책관	이 재 갑
고용평등정책관	허 원 용
국제협력관	이 성 기
대 변 인	문 기 섭
감 사 관	장 화 익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 원 장	김 대 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 원 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 원 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 재 섭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 민 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 사 장	김 선 규
산재의료원이사장	정 효 성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사 장	허 병 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 운 기
한국고용정보원장	정 인 수